
2018년 경제정책방향

2017. 12. 27.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2017년 경제정책 평가	1
II. 향후 경제여건 점검	2
III.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7
IV. 2018년 경제정책 과제	9
1.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	9
2. 혁신성장	20
3. 공정경제	36
4. 거시경제 안정	43
5. 중장기 도전 대응	47
V. 2018년 경제전망	52
【 별첨1 】 2018년 상세 경제전망	53
【 별첨2 】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	74
【 별첨3 】 2018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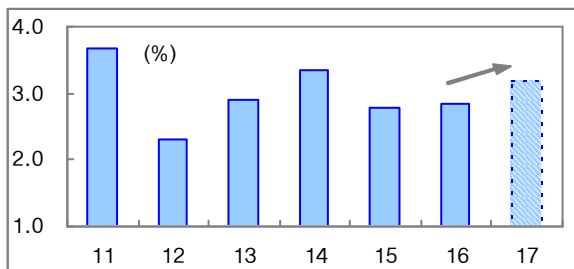
I. 2017년 경제정책 평가

◇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거시경제도 안정세 유지

-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
 -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8.10), 일자리 로드맵(10.18), 주거복지 로드맵(11.29) 등
 - 우리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가동
 -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11.2),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12.11) 등
 - 소득주도·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정경제 구현에도 역점
 - * 가맹·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7.19, 8.14),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0.18) 등
- 거시경제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며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
 - 세계경제 회복, 추경 등에 힘입어 3년만에 3%대 성장 복원
 - 통상현안, 북한 관련 이슈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
- 다만, 특정부문 중심 성장으로 부문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분배악화·고용부진 등으로 삶의 질은 취약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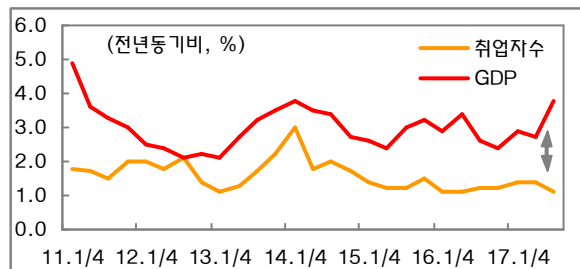
* 수출증가율(전체/반도체제외, 전년비, %) : ('17.1~11) 16.5 / 10.8

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GDP, 취업자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거시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성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일자리·혁신 중심의 구조적 대응 가속화 필요

Ⅱ. 향후 경제여건 점검

1. 성장 여건

①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성장모멘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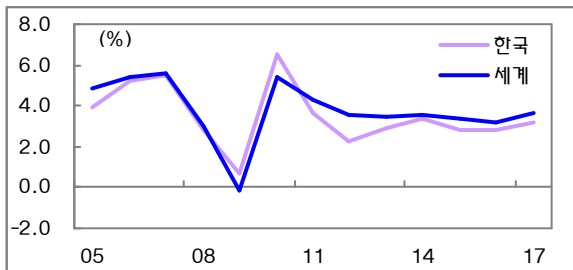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출중심의 성장세 지속 예상

* 세계성장률(% IMF) : ('16)3.2 ('17)3.6 ('18)3.7(2년 연속 개선은 금융위기 이후 최초)

- 일자리·소득주도 정책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 및 혁신성장 본격화 등도 성장세를 뒷받침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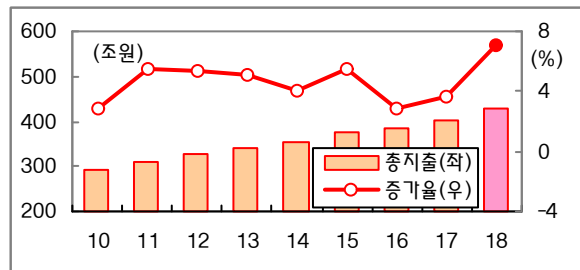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101('11년 이후 최고치) 상회

세계경제·우리경제 성장률



* 자료 : IMF('17.10)

예산증가율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본예산 기준

② 금리 상승 본격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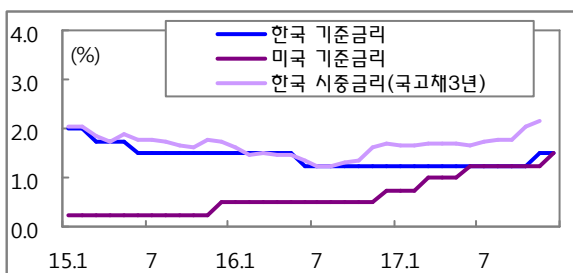
-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본격화되면서 가계·기업부담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우려

- 유가는 완만한 상승 예상되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美 셰일오일 생산 증가, 지정학적 불안·산유국 감산이행률 하락 등 상하방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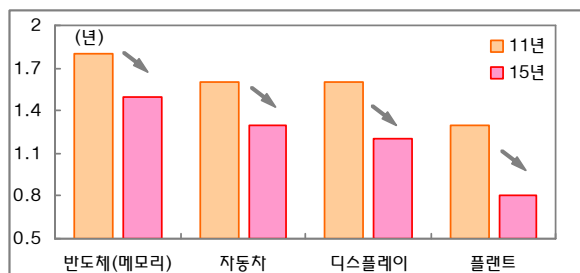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흥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력 격차 축소 등도 성장 지속가능성을 제약할 가능성

한-미 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금센터

한-중간 기술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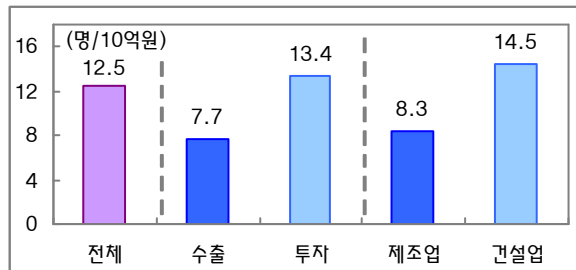
* 자료 : 산업기술평가원

2. 민생 여건

① 정책효과로 고용증가세 예상되나 산업·인구요인 등은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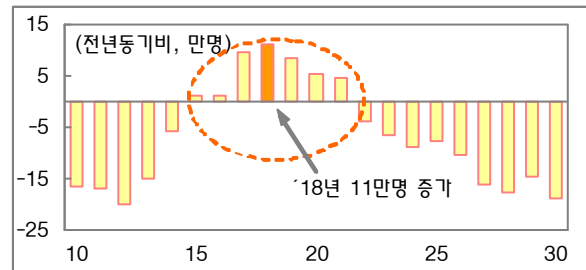
- '17년 추경 및 '18년 일자리 예산확대 등으로 고용증가세 유지 예상
 - * '18년 일자리 예산(19.2조원)은 '17년 예산(17.1조원) 대비 12.7% 증가
- 다만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제조업 중심 회복,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 전환 등은 취업자 증가세를 구조적으로 제약
 - 청년층은 정책효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 구직활동이 집중되는 내년 상반기 취업애로 심화 우려
 - * '18년은 경찰참가가 높은 20대 후반 인구 11만명 증가 예상

부문별 취업유발계수 비교



* 자료 : 한국은행

20대 후반(25~29세) 인구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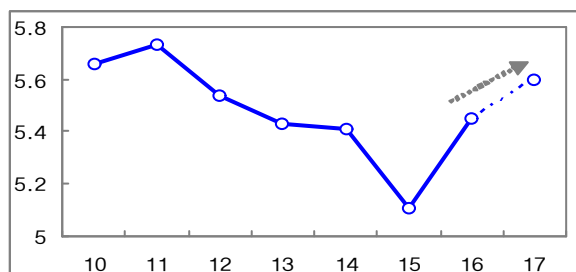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② 복지확충 등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정책시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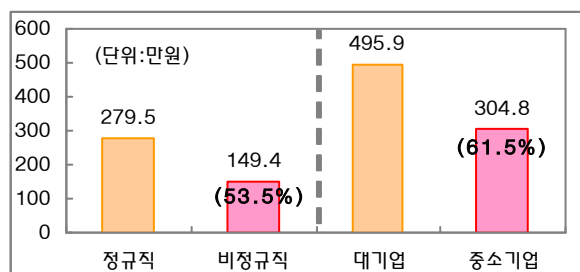
-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노력 등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정책효과에 시차 존재
 - * 임시일용직 일자리(전년비, 만명) : ('15)5.5 ('16)△6.9 ('17.1~11)△9.6
 - * 분위별소득(증가율 '15→'16→'17.1/4~3/4, %) : (전체)1.6→0.6→1.3 (1분위)4.9→△5.6→0.6
- 취업 등 일자리 여건 개선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필요

5분위배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계층별 임금격차



* 자료 : 고용부,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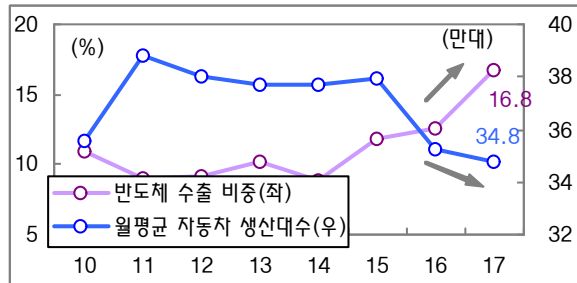
3. 산업 여건

① 일부 업종 호조세, 다만,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창출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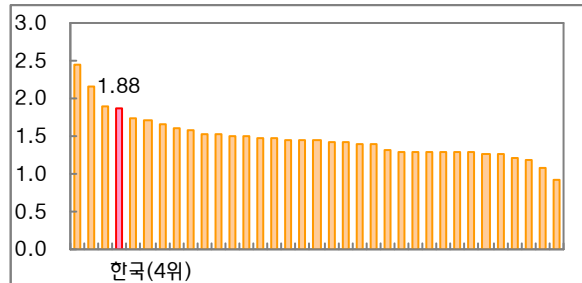
- 반도체 등 일부업종은 역대 최고 수출 등 호조세이나, 조선·자동차 등 우리경제를 견인해온 주력 제조업 부진 지속 예상
- 각종 규제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 하락을 보완할 서비스업·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은 지체

* 세계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 절반 이상이 규제 등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업 불가

반도체 수출 비중, 자동차 생산 추이



OECD 상품시장 규제(PMR)



* 자료 : 통계청, 관세청, '17년은 1~11월 평균 * 자료 : OECD('13)

②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노력 지속 필요

-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지속되며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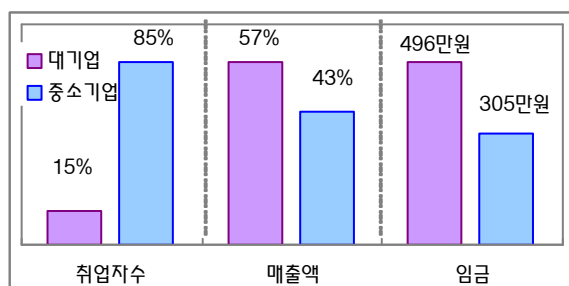
* 중소기업 중 수급기업 비중(%) : ('13) 43.6 ('14) 46.2 ('15) 47.3

* 하도급법 위반 사례 : ('13) 1,729 ('14) 1,638 ('15) 1,844 ('16) 1,887(조정건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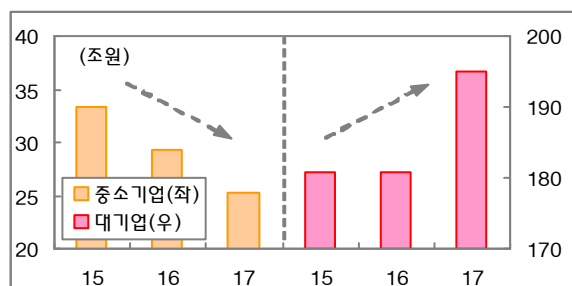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간 수익성·임금·설비투자 격차 등이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긴급

*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 ('13)4.7/3.2 ('14)4.4/3.1 ('15)5.5/3.6 ('16)6.6/3.9

대-중소기업간 격차('16)



대-중소기업 설비투자 추이



* 통계청, 한은 ** 취업자수, 매출액은 전체 대비 비중 * 자료 : 산업은행

4. 경제 구조적 여건

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구가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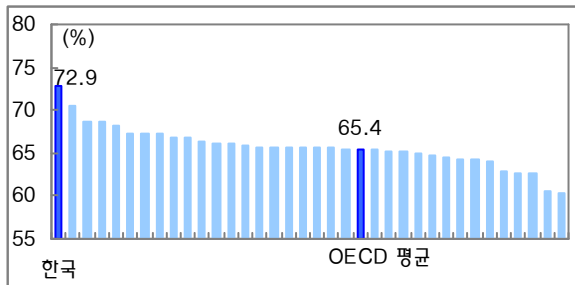
○ 그간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온 인구요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본격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인구 오너스)

○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17년 고령사회 진입

* 고령사회 진입 소요기간 : (한국) 17년 (일본) 24년 (미국) 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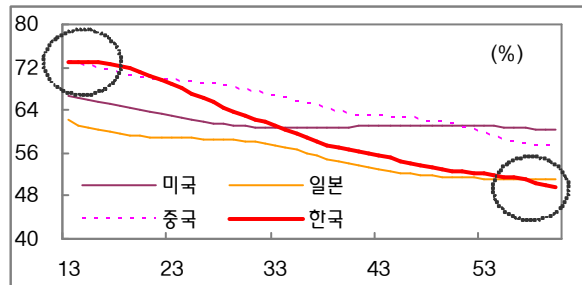
⇒ 인구 변화는 성장·재정·세대간 격차 등 경제전반 변화 초래

생산가능인구 비중 국제비교



* 자료 : OECD, '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



* 자료 : OECD,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② 저출산 심화로 중장기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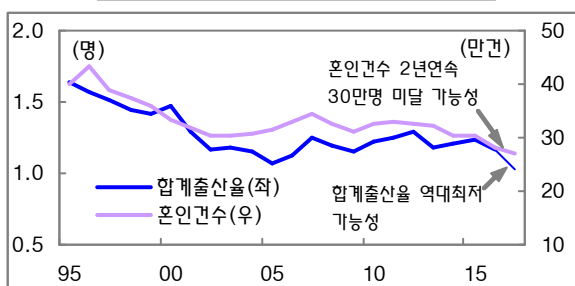
○ 그간 완만하게 개선되던 저출산은 만혼·비혼 확산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 혼인건수가 지속되며 다시 악화되는 모습

* 합계출산율(명) : ('05) 1.07 ('10) 1.23 ('12) 1.30 ('14) 1.21 ('16) 1.17

* 우리나라는 결혼이 출산의 전제조건(혼외출산율 : <韓>1.9 <美>40.2 <OECD>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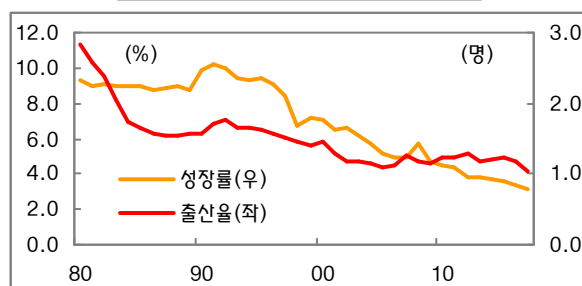
○ 저출산은 「장래 청년인구 감소→출생아수 감소」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

혼인건수 및 출산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출산율 및 성장률 추이



* 자료 : 한은, 통계청, 성장률은 10년 이동평균

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상승 추세이나, 여전히 미흡

-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등 유희인력 활용이 긴요

* 여성 경활참가율이 '50년까지 남성 수준까지 확대시 경활인구 18% 증가(OECD,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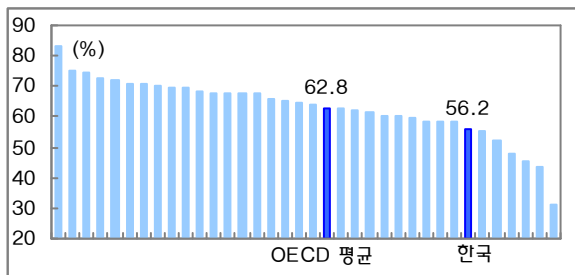
- 그간의 노력으로 여성 고용률은 상승 추세이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력단절 지속(M자 커브)

* 여성고용률(15~64세, %) : ('12) 53.5 ('14) 54.9 ('16) 56.2

- 임금수준 · 고용형태 등에서도 남-녀간 큰 폭 격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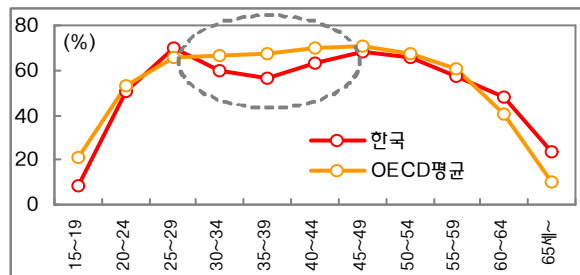
* 고용여건(남성/여성, '16) : (시간당 임금) 1.9/1.3만원 (비정규직 비중) 26/41%

여성 고용률 비교



* 자료 : OECD, '16년 기준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비교



* 자료 : OECD('14년), 한국은 '16년 기준

4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노인빈곤 및 사회통합 저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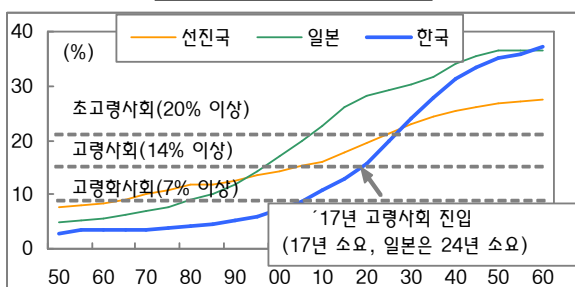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진전은 성장률 둔화 등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 요인만 감안시 성장률은 '00~'15년 3.9% → '16~'25년 1.9%로 하락(한은)

- 노인빈곤률은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빈부격차 심화, 세대간 갈등 등 야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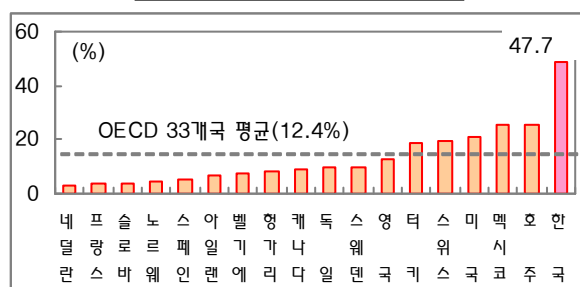
* 노인빈곤률(%) : ('12) 48.5 ('14) 48.8 ('16) 47.7

고령화 속도 비교



* 자료 : IMF('17.10)

노인빈곤률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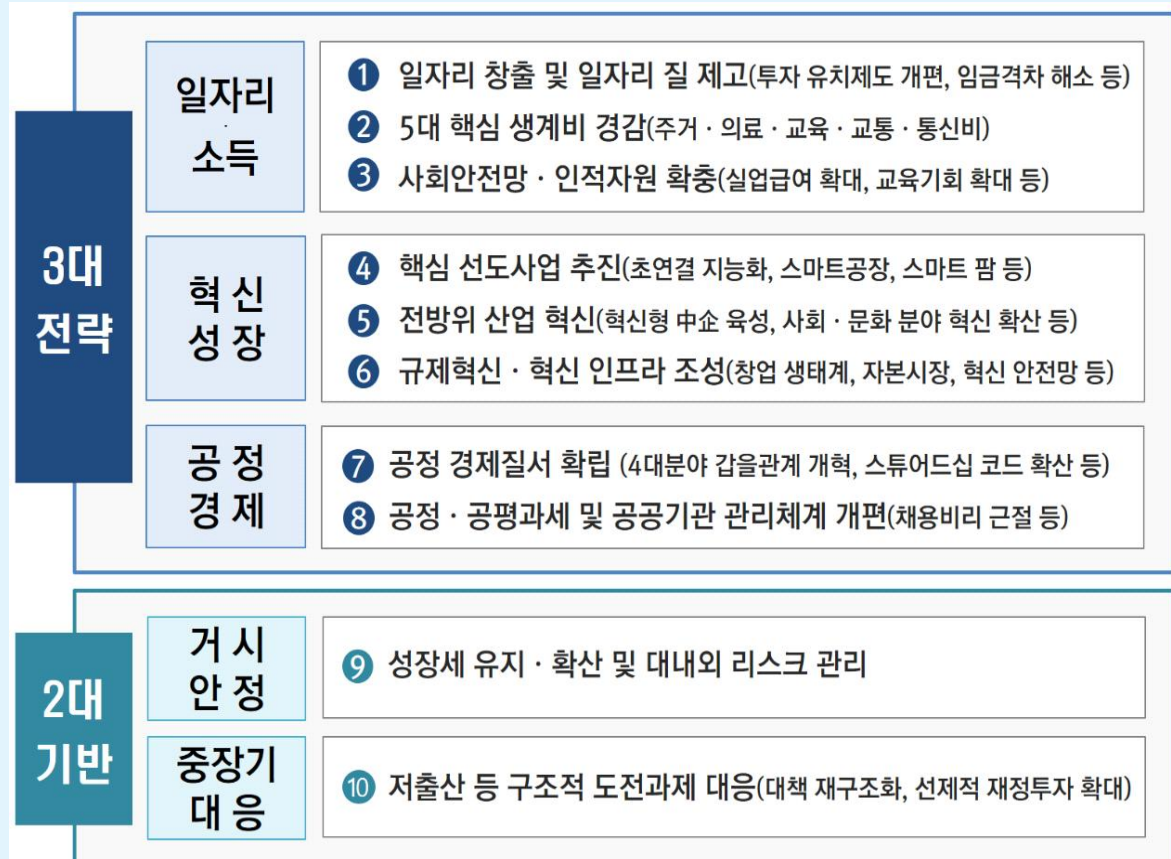


* 자료 : OECD('14년), 한국은 '16년 기준

Ⅲ.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 '17년은 새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으로서,
 - 새로운 경제비전 제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3%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화로 구조개혁 추동력 확보
- ◇ '18년은 3만불 시대 원년으로서,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
 - 삶의 질 개선 위해 일자리(量·質)·소득 여건 개선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
 -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



[참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의 중요성

※ OECD 등 38개국 대상 「Better Life Index」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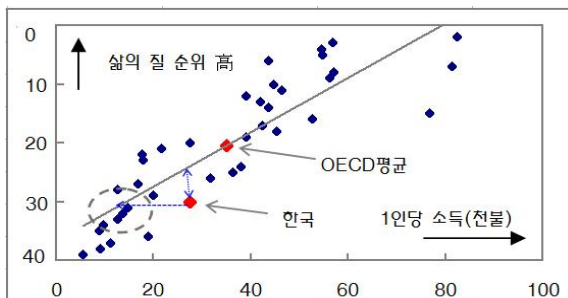
① 국민소득과 삶의 질간의 관계

- OECD 국가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
 - * OECD 등 38개 주요국의 국민소득과 삶의 질 지수간 상관계수: 0.87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은 3만불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나, 삶의 질은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모습
 - * 삶의 질 순위 : ('12)24 → ('13)27 → ('14)25 → ('15)27 → ('16)28 → ('17)29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음의 관계)
- ⇒ 삶의 질 개선 없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가능성

② 우리나라의 세부항목별 삶의 질 현황

- 교육, 기대수명 등은 양호하나 주거, 소득, 고용 및 삶의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미흡
- (주거) 주거내 기본시설, 개인당 방 수 등 주거의 질 취약(27위)
- (소득) 금융자산 및 순가처분소득 등 가계소득 미흡(23위)
- (고용) 최장 근로시간 및 여가부족 등 일과 삶의 균형 취약(35위), 낮은 고용률(22위)
- (건강) 스스로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 최하위(3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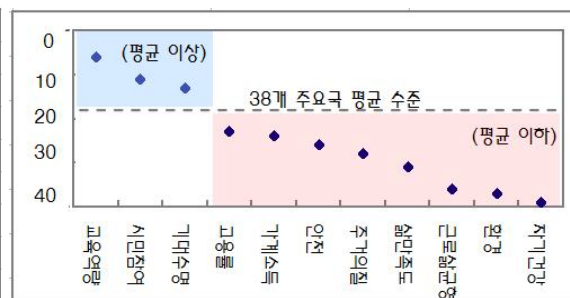
OECD 국가별 삶의 질 순위와 국민소득



* 자료 : OECD, World Bank

* 삶의 질은 '15~'16년, 소득은 '16년 기준

우리나라 세부항목별 삶의 질 순위



* 자료 : OECD

* 삶 만족도는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제고 필요

⇒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IV. 2018년 경제정책 과제

1.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

◇ 가계소득 확충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 성장 2단계 추진

1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 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
-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 신속 지원
 - * 전력 등 인프라 애로 해소, 투자 진행상황 점검 및 지원사항 발굴 등 밀착지원
-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대폭 확대('17: 249개 → '18: 1,000여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
-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창출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 * 상시근로자 1인당 450~770만원, 청년정규직 · 장애인 1인당 300~1,100만원 공제
-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복직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 일자리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공공조달 개선 추진
 - * (PQ)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가 일정수준인 업체만 입찰 참가 허용 (적격심사제) 일자리창출 우수업체부터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 심사

2 청년 고용애로 완화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등 대폭 강화

- '18.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 고용여건 및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 점검

-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중진공), 1: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 보장(1,000명 대상)
 - 우수 中企 구인·구직 DB를 구축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기업 발굴(1차: 2천개社 + α)
 - 특성화고, (전문)대학 졸업생 및 미취업자 대상 분야별 집중 교육(1~2개월) 실시 후 3년간 무제한 구직·구인 매칭 제공
 - * (청년)내일채움공제, 학위취득 지원 등 장기근속 지원과 연계
- 일자리카라반에 이어 ‘(가칭)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청년이 직접 참여·기획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 대안 마련
 - * 작업반(청년대표 + 전문가 + 관계부처) + 청년 참여단(100~200명)
 - 테마별 청년 고용정책 순차 발표
 - 일자리 포털을 통한 상시 정책제언·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 일자리 정책 관련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소통란’ 신설
 -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제언 + 정부 응답 책임
-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워크넷(고용부) 기업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정보도 표준화**
 - * 평균재직기간·근무경력별 평균임금 등 기업 정보를 민간과 공유 → 구직자 접근성 강화
 - ** 구직자 정보를 표준이력서화해 한번 작성으로 다양한 구직활동에 활용
- 청년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중소기업 추가고용(2+1)장려금 지원 요건 대폭 개선*
 - * (대상) 233개 성장유망 업종 → 100개 이상 추가
(방식) 3·6·9인 고용 시에만 지원 → 인원비례 지원(예 : 4인 고용 시 1.33명분)
(한도) 기업당 최대 3명 →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에 일시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뒷받침(7년후 평균 4500만원 + α*)
 -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600만원) + 내일채움공제(5년 평균 2500만원) + 장기재직 일시장려금(400만원)

▪ 중견기업 시간선택제 채용시 인건비 지원 한시 확대

* (현행) 최저임금 120%이상 채용시 30만원 → (개선) 110%이상 채용시 60만원

○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 한일 대학간 3+1 제도* 실시, K-Move스쿨 집중지원 등을 통해 일본·아세안 지역 1만명('18~'20년) 취업 지원

* 예) 우리 대학 3년 + 일본 대학 1년 → 일본 취업

** 국내 대학·일본 대학간 매칭 행사 개최('18.上)

▪ 해외취업 여건 개선을 위해 中·美 등 청년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 중심으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 조건 완화 등 추진

* (中)취업비자 발급 요건 완화, (美)전문직 비자쿼터 입법 등 위한 아웃리치 강화 등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EDCF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인 참여 개발사업 확대** 등 청년의 국제협력 분야 진출 지원

* 고용증가 기업에 대하여 수은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입찰평가지 가점 부여, 수원국에 부과되는 차관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수원국의 고용증가 기업 선정 유도

** 한국형 개발모델을 활용한 신탁기금사업 개발, 국내 컨설턴트 풀 활용 등

▪ 韓商·해외진출 기업 등과 연계한 인턴십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청년들의 해외경험 축적 지원

* 한상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자 현지 취업시 가점 등 참여자 인센티브 강화, 국내기업 진출이 활발한 제조업(섬유·패션·자동차·플랜트 등) 분야 인턴십 운영 등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년(34세 이하) 적합 일자리사업(17개, 2.6만명)*의 청년 우대선발 비율 확대(최소 50% → 70%)

* 항공전문인력양성,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등

▪ 기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사업(10개, 4.5만명)의 경우 청년 20% 우대 선발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국가기록물 정리, 문화재 돌봄사업 등

③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견인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재정을 조기집행(58% 이상)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4분기중 역대 최고수준 집행
 - * 일자리 예산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 ('17) 33.5% → ('18) 34.5% 이상
- 12월중 예산배정계획 확정(상반기 68%), 사업 조기공모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1월부터 집행 개시
- 지자체(57%)·지방교육청(58%)도 일자리·SOC 등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금년보다 확대(2.2→2.3만명+a)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17년은 45%)
 - 금융 공공기관(산은·수은·기은 등)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 유도
- 공무원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선발 소요기간 1~2개월 단축, 既 선발·선발예정 공무원 조기발령 추진
- 공공 사회서비스(보육·요양·보건 등) 일자리를 25만명('17년대비) 확대

④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의 질 제고

【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유도 】

-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되, 한시적·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강구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 개편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지원팀 운영 등 집행점검·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누락 방지를 위한 사회보험 신규가입 지원*
 - * 두루누리 지원 확대(지원기준 월보수 140→190만원, 지원율 60→80~90%), 건강보험료 감면(5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일자리 안정자금의 영세업체·저소득 근로자 지원 효과 등을 감안하여 EITC·사회보험 연계 등 개편방안 마련

- 상반기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민간·국책연구 합동 TF)하고 산업범위 조정,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실직시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패Ⅱ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 (청년) 소득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이하 → (최저임금실직자) 중위소득 120%이하

【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

- 공공부문 2·3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속화
 -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등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및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추진(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 * 비교대상 근로자 인정범위 확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간소화(확정판결 요건 폐지)하여 체당금 수령기간 대폭 단축(7 → 2개월)
 - * 체당금 결정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 강화 병행
- 도덕적 해이·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체불예고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병행
 - * (사업주) 부과금 부과, 재산 사전보전 및 국세채납처분에 따른 변제금 회수 등 (근로자) 부정수급시 추가 징수액 한도 확대(부정 수급액의 2배 → 5배) 등

【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완화 】

- 「대기업 → 中企 → 근로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하고,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기반 조성
-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미래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한편, 제도 법제화와 함께 세제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中企·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시 근소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하고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시 우선선발·가점부여, 컨설팅 비용 지원 등

- 상생협력기금('13~'17년 7,300억원 조성)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 *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대기업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해외동반진출 등
- 대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부여)
-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1월)
 - *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으로 거래대금 지급여건 개선, 은행의 약속어음 발행 요건 강화, 종이어음의 전자어음 전환 유도,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 등
- 대기업과 1차 협력사(주로 중견기업) 위주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
 - 대기업이 1차와 2차 이하 협력사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협약이행평가 기준(공정위)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 결제시 상생결제 활용 의무화(상생협력법 개정)
 - * 대기업 등이 1차 거래기업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거래기업이 대기업의 신용을 직접 활용하여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는 시스템
 - 상생결제 세제혜택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 신설 및 우수기업 사례 공개
- 동반성장 평가의 신뢰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 평가대상 확대, 정량평가·절대평가 방식 도입 등
 - ** 예) 최우수기업에 대한 훈격·포상 상향 등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정비 】

-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표준안 개발·보급* 및 임금 정보공개 인프라 강화**
 - * 보건의료·호텔·공공행정·사회복지서비스 등 기개발 업종 외 신규 업종 추가 발굴
 - ** 직종·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임금정보 시스템 검색 고도화(직급 추가, 직업분류 개선) 등

- 남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시 성별 고용형태·임금수준 등에 미치는 효과 반영
-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공표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정보 공시 의무화 추진

5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 등으로 삶의 질 개선

-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 및 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
 - *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月 최대 80만원) 지원기간 연장(1→2년, 제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인원 한도(고용보험 피보험자 30%) 폐지
 - **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시, 지급 금액의 80%(월 4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중견기업까지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근로자·기업 등 공동 적립으로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 사업설계 연구용역('18.上) 후 사업운영지침 제정('18.下)
- 공휴일 제도 개선,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 활동을 촉진하여 삶의 질 제고
 -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 강구
 -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하여 연월차 사용 활성화 유도
 -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상반기) 및 공공부문·기업의 장기휴가 사용 독려
 -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차에도 최대 11일 휴가 부여
 - * (현행)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 → (개선) 입사 1년차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 2년간 최대 26일 휴가 사용 가능

⑥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 ① (생계비 경감 인프라 구축) 주기적인 소득 수준 및 주요부문 생계비 분석을 통해 분야별* · 지역별 맞춤형 생계비 경감 유도

*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 부문

- ② (주거) 공적주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18년 19만호)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

- 노후공공청사(2만호),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1만호)을 통해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당초 2만호 → 3만호)

-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확대**

* 임대료 부담 절감 위해 주거공간을 공유, 독서실 · 게스트룸 · 식당 등 공용시설 제공

** 행복기숙사, 국립대 BTL 기숙사,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등 기숙사 건립 확대

- LH · 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18년 시범사업 200실)

*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저리(1.5%) 융자지원하고 대학이 추천하는 청년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공급

-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모기지 재설계

- 디딤돌대출은 지원규모를 확대*(+2.2조원)하는 가운데,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하여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고 금리혜택도 확대**

* 공급계획(조원) : ('17)7.6→('18)9.8 ** 현 금리(연 2.25~3.15%)보다 최대 25bp 인하

- 적격대출을 통한 대출구조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되,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여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 (현행) 보유주택수 요건 없음 → (개선) 무주택 · 일시적 2주택자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 · 임차자금 마련 지원

* 연간 600만원 한도, 최고 3.3% 금리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③ (의료) 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합리화 등 의료비 부담 완화

-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건보 편입*,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 건보적용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마련

*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률(50%~90%)을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18.上) 및 단계적 급여 전환

-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하여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 결정*('18.上), 보장범위 조정 등 추진

* 비급여 항목 급여화 →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부담 감소 → 보험사 반사이익 발생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적용('18.上)

* (동네의원) 환자교육·상담 등 관찰관리 서비스에 대한 신설수가 지급 등 (만성질환자)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본인부담 경감

④ (교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장학금·학자금대출 개선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8년 2조 586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 마련('18.下)

-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 확대(기초~3분위→4분위, 6.3만명 혜택), 소득인정액 산정시 본인소득 공제 상향(70→100만원, 2.6만명 혜택)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장래소득을 감안하여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검토(상반기중 연구용역 착수)

* (美 사례) 수업료, 방값 등을 포함한 총학비를 이자없이 지원받고, 취업후 연소득의 일정비율만큼 상환(9년내, 지원금액의 2.5배限)

-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연 1,856만원) 상향 조정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상환금액 = (연소득 - 상환기준소득) × 20%

- 신복위와 장학재단간 연계*를 통해 약 2만명**(추정)에 대하여 학자금대출 및 금융채무까지 종합적으로 채무재조정 추진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
→ (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

** 학자금 연체자 6만명 × 학자금 대출자 중 금융기관 채무보유 비중(약 35%)

⑤ (통신) 요금 감면 및 경쟁 촉진 등 통신비 구조적 안정 노력 추진

- 전국 어르신 11,000원 요금감면 시행('18.上), 보편요금제 도입('18.上, 법안 국회 제출) 및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 추진*

*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

-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9월)

*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⑥ (교통) 지역 교통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생활 교통비 경감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 확대*

* 지자체 등의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 ('17년) 18개 시군, 9억원 → ('18년) 160개 시군, 80억 >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19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 도입 및 실행화 전략 연구(~'18.3월), 제도개선 발굴 후속 연구('18년중)

⑦ (식품) 생산-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시스템 구축

- 생산 전단계(파종-정식-생육-출하)에서 체계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관측 고도화*, 수급조절매뉴얼** 개편 등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수급예측모델(BIGFOS), USN, 드론 활용으로 농업관측 고도화

** 수급조절매뉴얼 조치대상 : (기존) 생육·출하기 → (개편) + 파종·정식기 등

- 중앙주산지협의회*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 조절 등 생산 前 단계부터 생산자가 직접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중앙주산지협의회 : ('17) 배추·무·마늘·양파 → ('18) + 대파·고추

7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기회 확대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 사회안전망 확충 】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기간 연장(30일 이상), 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완화 등 실업안전망 강화
 - * 제도개선 방안 마련('18.上)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18년)
-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20→21.3만원, 6.5%, 서울 1인가구)와 교육급여(9.5→16.2만원, 70%, 중고생) 대폭 인상
- 장애인 가구·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월 20.6→25만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지원대상 : 1.6→1.7만명, 단가 : 135→157만원)
 -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월 12→13만원)하고, 지원연령도 상향 조정(만 13세→14세 미만)
- 취약차주 보호 강화*, ISA 가입 혜택 확대** 등을 통한 서민 재산형성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확대
 - * 연체부담 완화 등 차주 특성별 지원,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등
 - ** 비과세 한도 확대(서민형 250→400만원),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 등

【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

-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추진
 - * (法) 기회균형 선발(정원 내 5→7%) 확대, (醫齒韓) 기회균형 선발(정원 외 5%) 신설
 - 기회균형선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 강화
 -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시 기회균형선발 관련 배점 확대
- 특수교사('18년 1,173명 증원) 및 특수학교('22년까지 22개교 설립) 확충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사회이동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종합 지표체계* 개발
 - * 관계부처 TF를 통해 평가영역·핵심지표 구체화, 연구용역 등 추진

2. 혁신 성장

◇ 우리경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선도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

1 「핵심 선도사업」 추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 혁신성장을 견인·확산할 핵심 선도사업(추가과제 지속 발굴)에 R&D·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역량을 결집, 집중 추진

* ① 혁신기반 기술, ② 잠재 시장규모, ③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 구성, 부처별 소관과제 추진체계 정비(필요시 TF 구성) 등 통해 규제 등 애로요인을 원스톱 지원

* 기재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 부처별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 민간투자 프로젝트 애로해결 등 지원

○ ‘18.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확산·공유

핵심 선도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초연결 지능화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공공·민간 빅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등),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5G 세계최초 상용화), 핵심인력 양성(~'22년, 4.6만명)
스마트 공 장	업종·규모별 시범공장 구축(~'22년, 50개), 스마트공장 구축 전용 정책 자금 운용('18년, 3,300억원),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R&D('18년 40억원)
스마트팜	준비(스마트팜 보육센터 구축) - 창업(농식품 벤처펀드 등 자금 지원) - 성장(R&D 바우처 등 기술지원)에 이르는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확립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고객요구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의무화), 빅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에너지 신산업	공공기관 부지 등 활용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인센티브 강화(예 : 농업인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등), 입지규제 정비
스마트 시 티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22년),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18년중 5개 지역),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R&D 강화('18년 77억원)
드 론	기술개발 R&D 확대(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교통관리체계), 실증 인프라 구축 (비행시험장 확충), 시장창출 지원('22년까지 3,700대, 드론부대 창설 등)
자 율 주행차	기술개발 R&D 확대(고해상도 카메라·레이더 등 핵심부품 관련), 실증 인프라 확충 (테스트베드(화성 K-CITY), 시범주행(판교·평창) 등)

②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 구축-개방-유통·활용 등的全过程에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금융·교통 등)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 IoT 연결기기 확대, 세계 최초 5G 상용화('19)와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18)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및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용 주파수 공급('18년)
 - 기초기술(산업수학·뇌과학 등), 지능화 기술(AI·지능형 반도체등), 융합기반 기술(AI-로봇, 블록체인 등) 등 3대 분야 R&D 중점 추진
-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비식별자료 활용·결합 등의 법적근거 명확화
 - * 비식별정보 개념, 비식별 조치의 범위 등에 대한 근거 신설
 -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실시, 1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 강화*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개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에 명시
-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R&D 프로세스 쏠단계를 혁신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R&D 자원배분 혁신
 - 중장기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중점 지원분야를 '혁신성장동력(13대)'으로 통합*·유형화**하고, 집중 지원
 - * 현재 성장동력은 미래성장동력(19대)과 국가전략프로젝트(9대)로 분산 추진 중
 - ** (조기상용화) 자율차, VR·AR,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로봇 무인기,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확보) 차세대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인공지능, 혁신신약
 - 민간 주도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을 통해 연구자들이 직접 도출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R&D 제도혁신방안' 마련('18.上)
 - * 평가체계 이원화(과정중중/성과중심)를 위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8.12), 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 등 추진
 -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개발하여 R&D 예산 배분·조정시 활용하고, 예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타 기능을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위탁
 - * 분야별로 기술개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투자지원시스템

③ 「산업·경제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전방위 금융혁신】

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뒷받침

-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본부의 예산·인력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코스피와의 차별화 촉진
-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노력 지속

① 벤치마크 지수 변경(코스피→코스피·코스닥 혼합)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②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 제공

③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운용상품 집중도 배점 확대 등), 연구용역을 통한 연기금 투자폴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예 : 주식·대체투자 등 다양화 등)

-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 및 기술특례상장기업 자금지원 확대

① 코스닥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운용 관련 세제지원 요건 완화(예 : 의무투자비율 조정 등)

②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상장 3년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

- 코스닥 진입규제 등 자본시장 인프라 재정비

①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시 상장주관사 등의 풋백옵션 경감 추진(現 3개월 90%)

② 기존 테슬라 상장요건(시가총액 500억원 & 2년평균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등) 외에 시가총액, 자기자본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요건 확대

②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 기술금융 공급을 140조원 수준('17.3/4분기 116.2조원)으로 확대
- 기술력·매출전망·영업수익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

* 기술력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IP)·매출전망·영업수익전망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新기술금융 모형')

- 특히, 지식재산권(IP), 동산 등을 활용한 대출·투자를 적극 활성화하여 기술금융 저변을 확산

① (I P) 총 800억원 규모 IP 투자펀드 조성('18년 4개) → IP 금융규모 추가 확대('17년 3,500 → '18년 4,500억원)

② (동산) 동산담보대출 이용가능 차주범위 확대(예 : 제조업 → 여타 업종 추가), IoT 기술통한 담보물 사후관리 유도(예 전자식별장치로 관리시 담보인정 비율 우대 등)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전문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인프라 확충

① TCB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 관리기준(예 : 기술평가분야를 세분화하여 관련 전공자가 검수인력에 배치되도록 조치)을 마련하고,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

② 기술평가관리사 제도의 확대 개편(교육 강화, 자격증 선발인원 확대 등)

③ 금융연수원 등의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기 공동 교육 및 위탁교육 등 실시

-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기술평가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통합

①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 모형 개발

② 통합 여신심사모형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8.下)

* 여신심사 모형 통합방식, 절차, 향후 데이터 축적에 대한 상세지침

- ③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핀테크 확산 등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 유도(핀테크 기업 : '18년 250개 → '22년 400개로 확대)

- 금융업의 인가업무 단위 개편, 합리적인 요건 정비, 인가 절차 투명성 제고 등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및 금융회사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 확대 도입(금투업권 → 은행·보험권)

*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본인인증 없이 금융거래 가능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내 계좌 한눈에")를 주 금융권으로 확대(은행, 보험, 상호금융 →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포함)

- ④ 산은 등 정책금융 기능을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민관TF 구성 및 연구용역 후 연내 방안 마련)
- 산업은행은 대기업·기간산업 위주 지원에서 혁신기업·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
 - 신·기보는 신용·기술평가 등 보유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활성화 적극 지원

【 사회·문화 혁신 : ICT·창업 인프라 등 활용, 혁신성장 확산 】

- ① (문화) 융복합·한류 등 유망 문화 콘텐츠 혁신을 위한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18.上)' 및 영화 등 분야별 진흥정책 마련
- 게임·출판 등 부문별 펀드 조성(총 1천억원 이상)을 통해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콘텐츠 벤처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
 - 'VR 종합지원센터'를 조성('18.3)하여 융합콘텐츠 벤처기업에 입주공간 및 제작 인프라를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 추진
- ② (관광) 新관광 서비스 창출 및 고급화 등 고부가가치화 지원
- 웰니스(wellness) 등 관광분야 융복합 수요와 연계하여 중국·동남아 등 지역별 방한 관광 고급화 전략 마련('18.上)
 - 관광산업 육성펀드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벤처보육센터 신규지원('18년 40개) 등 통해 신관광서비스 기업 지원('18년 80개)
- * ('17)270억원→('18)300억원, '22년까지 1,500억원 조성
-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집적시설을 지정하고 용적률 완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③ (교육)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50종)*,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 등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18.上~)

* 가상(VR)·증강현실(AR)이 도입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 공공·민간 참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환경

-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내년초 조기 지정(10개교)하고, 대학창업펀드*(150억원 규모) 확대 등 창의·융합교육 강화

* 대출이 아닌 투자형 집행으로 실패시 재도전 가능, 투자운용 자율성을 보장

④ (환경) 최근 환경이슈(미세먼지 등) 및 신기술 융합 등에 대응하여 환경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18.上)

- 대기·물·생물자원산업을 중심으로 R&D,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금*, 실증인프라 조성 등 지원 추진

* 환경산업 전문 투자펀드('18년 750억원), 환경산업육성 융자지원('18년 455억원)

⑤ (보건) ICT 접목,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제약·바이오 혁신기업 육성 추진

-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정책·학술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플랫폼 구축 추진('18.上~)

⑥ (공공서비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18.下)하고, 신기술 기반 선도과제* 추진

* '지능형정책도우미', '맞춤형 전자도우미', '블록체인서비스 활용기반' 등

- 주소기반 산업 표준모델 개발* 및 정보체계 개선, 종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

* (자율주행차)주차장 상세위치 서비스, (무인드론)배달경로 주소정보 표현모델 등

【 농축수산업 혁신 :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① 스마트팜 양식과 연관산업간 동반성장형 영농모델 구축

- 농업인·식품기업·스마트팜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5년간 4개소)' 마련('18.上)

* 생산(농업인) - 판로·구매(식품·외식·농생명기업) - 인프라(스마트기자재업체)

-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어업인 및 유통·가공기업 참여 유도

* '18년도 신규 1개소(경남 고성), 향후 동·서·남해 권역별로 확대 추진

- 대규모 양식업 투자를 위해 외부자본 유치* 등 규제 완화

* 연어·참치 등에 대해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등(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② 기술금융 체계를 전면 적용하고 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 농수산업 전문기관의 기술등급평가를 기술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수산 분야 기술신용대출 확대 유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TCB간 업무협약 체결

- 농수산 분야 기술평가기관 확대*를 통해 기술보증 지원 강화

* (농신보 우수기술자 신용보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추가
(신보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추가

- 수산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

* ('17) 금리 3%, 지원한도 5억원 → ('18) 금리 2.5%, 지원한도 10억원

- 농신보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예시: 개인/법인 10/15 → 15/20억원) 하고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 개편 추진

* 현행 : (개인/법인) 1억원 이하 0.3/0.5%, 1~5억원 0.4/0.7% 5억원 초과 0.6/1.0%

③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촘촘한 창업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팜 보육체계(입문-인턴-경영실습-창업) 강화, 자금·기술·판로 지원 등 종합적인 농업분야 청년 창업 지원방안 마련(1월)

* 지자체 주도 임대형 농장 도입, 농신보 우대보증, R&D 바우처 제공 등

- 농식품벤처펀드·수산펀드, 혁신모험펀드 공동 투자*('18년 400억원, 3년간 1,200억원) 및 스마트팜·양식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50→70억원)

* 농식품 모태펀드의 농식품벤처펀드, 수산펀드 출자 수준으로 혁신펀드(모태펀드) 매칭출자

-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기업(창업 3년 이내)에 대해 농신보 보증비율 상향(85→90%) 및 신보·기보 보증요율 우대

【 서비스업 혁신 : ICT 등 新기술 기반의 新서비스 모델 창출 】

- ① (스마트해상물류)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추진('18.上)

* 자율운항선박 R&D(기획연구, ~'18.4), 고속해상통신망 구축(기지국 320개 설치 등, '18.6~), 부산신항 화물정보공유시스템·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 ② (스마트홈) 스마트 가전기기 개발*, 자동차·치안 등을 연계한 지능형 융합서비스 발굴 등으로 거주자 중심 스마트홈 구현

* IoT 가전 R&D('18년, 20억원), 가정용 소셜로봇 R&D('17~'19년, 85억원) 등

- ③ (교통 O2O)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하여 교통·부동산·관광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교통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기반 국가교통 정책 솔루션 R&D('18.4~'22.1월, 261억원)

- ④ (헬스케어) 개인별 암 최적 진단·치료법 개발 및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P-HIS)을 구축(~'21년)하고 의료기기R&D* 확대 추진

* 의료기기R&D 사업('20~'29년, 3조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정('18년)

- ⑤ (공유경제) 공유 민박업 신설로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카풀업계간 공존방안 마련(3월)

【 중소기업 혁신 : 우리 경제의 혁신 주역으로 육성 】

- 산·기은 등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244.1조원으로 확대,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

*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중진공·무보·지신보 : ('17)234.4→('18)244.1조원 (+9.7조원)

- 중소기업간 협업 통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중소기업 협업사업 관련 내용을 규율하는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협업전문회사를 도입하여 창업기업 수준 지원

* (주요 내용) 협업사업의 등록·관리, 지적재산권·수익분배, 분쟁조정절차 등

-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투자·경영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 도입·운영(산은·중진공 등, 2,500억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협업체**의 공동 R&D에 대한 지원 확대('17년 72억원→'18년 147억원)
- R&D·생산 등에 대한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18년 3,300억원, 중기부)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中企 R&D 혁신방안」 마련(1월)
 - *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新분야 집중 지원
- 창업·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육성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을 단계적 통합·개편 추진
 - * 기업마당, K스타트업, 마케팅지원시스템 등 통합 관련 연구용역 추진 ('18.上)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 】

- **추경재원**('17년 8,000억원, 모태펀드) 등을 마중물로 **1.4조원 벤처펀드** 조성을 1월까지 완료*하고,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등 분야 본격 투자**
 - * 운용사 선정 완료(10.11일) → 민간자금 모집 완료('18.1월) → 개별기업 투자('18.2월~)
 - ** 청년창업(0.6조원), 4차산업혁명(0.5조원), 재기지원(0.3조원), 지방(300억원) 등
- **민간 주도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 신속 이행
 -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팀** 대상으로 '상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재정 100억원 + 모기업 100억원) 본격 가동
 - * 사업운영지침 마련('17년말) → 사업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1월~) → 운영기업 협약체결(3월) → 사내벤처팀 선정·지원 및 창업휴직제 도입을 위한 협약체결(연중)
 -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 기반의 창업 지원기능 강화**
 -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1~2월) → 메이커 스페이스 운용기관 선정(4월) → 재정 235억원을 투입하여 일반랩 60개, 전문랩 5개 조성(5월~)
 - ** 특화분야 조정 및 참여주체 확대 등을 포함한 창경센터 세부개편방안 수립(1월)

- 보증·대출실적* 위주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하여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집중 지원

* (벤처유형별 비중) 보증·대출실적 90.2%, 벤처투자 3.7%, 연구개발 5.9%(‘17.11말)

** ‘19년 시행 위해 ‘18년내 법령 정비(벤처법 개정안 입법예고(2월), 국회제출(6월) 등)

-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TIPS 방식)을 벤처·창업 정책지원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전환 로드맵** 수립(5월)

* ‘18년중 사내벤처,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

○ 혁신기업에 대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

-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18년중 약 2.7조원 내외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18~’20년 10조원)하고, 보통주 투자 비중 확대

* ‘18년 재정 3,000억원(모태펀드 출자 2,000억원, 산은 출자 1,000억원) 투입

→ 1월중 「혁신모험펀드 세부 조성·운영계획」 수립·발표

- 벤처투자 관련 제도(창투조합·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등)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18년말 시행 목표)

○ 창업자의 재기 지원 강화 등 혁신안전망 확충

-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개인채무를 매입후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 실시

**①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일괄 매입,
민간 금융기관 보유분은 채무자 신청후 매입**

② 매입채권(10억원 이하)은 상환능력 심사후 적극 채무조정

③ 재창업 촉진을 위한 유인장치 마련

- 재창업시 원금의 상당부분을 지분형태로 출자전환하는 방식 검토
(→ 상환부담↓ + 재창업 유인↑)

- 과거 폐업시 발생한 ①부득이한 임금체불, ②세금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 중진공 재창업자금 지원 허용

* 노동법 위반시 5~15년간 지원이 제한되나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적극 면책

-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신기보·지역신보·중진공)의 연대보증제 폐지 추진

* (현행) 창업 7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폐지 → (개선) 7년 초과 기업도 전면 폐지

- 벤처기업 출자자에 한해 법인이 체납한 국세(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18년부터 한시적(3년간) 면제(2억원 한도)

① (대상) 벤처기업 출자자 :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② (요건) 소기업(매출액 30억~120억원), 연구·인력개발비의 매출액 비중 5%이상

【 기존 산업 혁신 : 주력 업종 경쟁력 제고 】

-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현황과 미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1/4분기)

- (조선)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마련

- 국내 화주·선사를 대상으로 LNG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LNG병커링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 LNG병커링 기자재 성능시험 설비 구축, 도시가스사업법·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한 LNG 급유 사업자 확대 등

- 스마트·자율운항 핵심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율 운항 선박시장 주도권 확보 기반 마련('18.上 예타 추진)

- (해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운업 재건방안 마련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년) 및 이를 통한 선박 확충, 화물 확보 등 분야별 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

* (원양 '컨') 선복량·해외터미널 확충, (연근해 '컨') 한국해운협의체 중심의 선사간 협력 증대, (벌크) 장기운송 계약 확대 등

- 노후 선박의 폐선 및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해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 시행('18년 43억원)

* 노후 외항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시 신조가의 10% 지원

- (자동차)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전략 마련

- (전기차)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 민간투자 유치** 등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

* 개소세 감면한도 인상(200→300만원) 및 일몰기간 연장('19→'20년)

**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총비용의 50%) 지급대상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한시적 확대

- (자율차) 9대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하고, 판교·평창올림픽 시범운행(2월) 등 국민체감형 실증서비스 추진

*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율차 실증·상용화에 필요한 규제이슈 사전 발굴·정비

○ **新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과감히 추진**

* ①사전 부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②시장중심, ③금융-산업 균형 고려

- 주요 산업별로 업황·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자본시장(구조조정 펀드), 회생법원(P-Plan) 등을 적극 활용
- 금융-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결정된 방안은 신속·과감·투명하게 추진

4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적성 중심의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기초·고등교육 환경 개선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사전단계로 선택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연구·선도학교 선정(100여개)·지원(최대 5천만원/교)
 -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선도학교 확대(57→100개교), SW교육 연구·선도학교(1,200→1,500교) 확충 및 핵심교원 육성(2,500명)
 -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개편 추진('18.下)

-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직업훈련 체계 개선
 -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주요 생애전환기별 직업교육·훈련 체계 구축
 - * 매 10년마다 개인별 직업능력 진단·상담 → 경력개발경로 설계 및 적합훈련 추천
 - 산업단지의 특성·인력수요를 반영한 산단형 공동훈련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을 토대로 단계적 확산 추진
 - * ①(프로그램) 업계 주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선정, ②(훈련대상) 산단 내 재직자, 인근 고교·대학 졸업예정자 등 대상, ③(훈련방식) 현장 전문가의 밀착교육
- 직업훈련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단시간(주36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年200만원 한도) 지원(現 중소 → 중견·대기업 포함)
 - * 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훈련이력 개인별 통합·관리
 -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 * (現)사업기간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만 지원
→ (改)사업기간 1년 미만이면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포함
 - 청년·경단여성 등 비경활인구의 직업역량 강화와 구직 촉진 위한 자유로운 훈련·학습비 지원프로그램(가칭 Learning Next) 도입방안 마련
 - * '18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대상, 규모 및 내용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5 「사회·제도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뒷받침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 노동시장 혁신 】

-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 통해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일자리모델 이행방안 마련
 - * '17.下 4개소(광주·전북·속초·시흥) 실시, '18년 지원사업 신규 공모 예정
 - 지역사회의 합의에 기초하여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시 일터 혁신 컨설팅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

- 노사정위원회 운영체계 개편방안, 논의의제 확대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정비 및 사회적 대화 본격 가동

* (구성) 비정규직 대표 참여 등 참여주체 다양화 검토
(의제) 논의를 통해 선정(노동시장 격차 완화, 공정임금 구축, 고용형태 다양화 등)

【 규제 혁신 】

- 「핵심 선도사업」 등에 대하여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제도

-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발굴·시행

- 핵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과제 발굴

- 국회입법 전이라도 행정입법(시행령·규칙 등)과 그림자 규제의 전면정비 등 현행법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규제부담 최소화

- i) 신기술·신산업 발전 저해 법령(시행령·규칙 등) 일괄정비

- 기재부 소관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하여 규제혁신 분위기를 전부처로 확산

① (외환) 외국환거래 분야 **무인·O2O(Online to Offline)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 허용**(외국환거래법령 정비)

* 온라인 환전신청 및 원화입금 → 지정한 오프라인 장소에서 외화 수령

② (주류) 소규모 주류 제조자(예: 하우스맥주) 면허시, 음식점, 주점 등 영업허가 취득 의무 요건 삭제 (주세법령 정비)

- ii)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의 원칙적 폐지 추진

- 폐지대상 규제는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거치되, 필요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발굴

-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존치 여부 결정

iii) 유권해석제도(‘非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활성화

- 신산업 진출可否 등 질의時, 법규해석 및 조치의견을 표명하는 유권해석제도(현재 금융분야 적용 중)를 모든 분야로 확대
- 질의 후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의 신속·적극적 행정행위 유도를 위한 시스템 마련(추진절차·면책 등)

- ❶ 부처내 ‘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되, 부처간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적극 활용
 - ❷ 감사원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관련 구체적 방안 마련

-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본격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분기별 성과 발표)

* 기업 건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해결→점검하는 상시 기업애로 해소 체계 (대한상의내 민관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 운영)

6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 **新시장** 개척을 통해 특정국가 의존도 완화 등 시장 다변화 도모
 - 러시아·우즈베크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교통·에너지·물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新북방정책 로드맵** 수립(4월)
 - ASEAN·인도를 잇는 **新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지역별·국별 실행전략 마련
 -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1월)하고, FTA 고도화 등 후속조치 추진
- 미·중·러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관련 경제분야 후속조치로 **경제장관회의, 공동위** 등을 통해 구체적·가시적 성과 도출
 - ‘18년 양자·다자 정상외교시 경제지평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성과의제 발굴 및 철저한 사후관리

-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수출바우처 참여부처를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통해 서비스 해외진출 선도기업 100개사 집중 육성('18~'22년간)
 - * ('17) 산업·중기부(1,786억원) → ('18) 산업·중기·농림·해수·특허청(1,900억원)
 - 중국진출 지원 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를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개편하여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기업 지원 강화*
 - * 국가별 진출계획 수립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수출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온라인수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고도화*
 - * (기존) 상품정보 제공 → (개선) 결제·통관·물류·외환정산 서비스 원스톱 제공
 - 바이엘(獨)·KDDI(日)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제공('18년 20개사)
 - *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원하는 글로벌 기업과 매칭지원
 - ** 해외 인허가·기술관련 교육, 입주공간 제공, VC 투자유치, 제휴 등
 - 중국 남서부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한·중 혁신창업단지* 등 입주 지원방안 강구
 - * 한·중 혁신창업 협력 MOU('15.10월)에 따라 중국 정부가 '16.3월 쓰촨성 청두시(成都) 시내에 1.7만평 규모의 벤처단지 조성
-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금융·외교 등 다각적 지원 강화**
 -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등 해외건설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가칭)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3월)
 -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3분기)하여 신규사업 발굴, 사업·금융 구조 설계, 협상지원 등 전방위 지원체계 확립
 - EDCF, 건설·플랜트 수출금융 등 지원을 확대(12.5→14조원)하고, 한-UAE 경제공동위 등 고위급 경협을 활용해 기업수주 지원
 - * 한-UAE 경제공동위, 한-우즈베크 경제부총리회의, 한-베 경제공동위 등을 활용해 에너지, 교통, 건설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
 - 공동보증제도 요건 완화('18.上, 수은 등 5개 금융기관* 전원합의 필요 → 2개 이상 기관 합의**시 발급)로 중소·중견건설사 해외진출 촉진
 - * 수은·산은·무보·서울보증·건설공제조합 / ** 합의기관만 보증발급 참여

3. 공정 경제

◇ 공정 경제질서 확립, 부문간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등 통해 성장 과실을 가계·中企·지역 등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

1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해 법집행체계 개편 추진
 - (행정)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한 2배 상향,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 간 조사·처분권 분담
 - (민·형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상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 *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 ** 신규도입(공정거래법·유통업법), 대상행위 확대(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법) 등
-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분야 甲乙관계 개혁 종합대책 추진
 - * 가맹('17.7월), 유통('17.8월), 하도급('17.12월) 분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리점 분야는 거래 실태조사(~'17.12월)를 바탕으로 종합대책 마련('18.上)
- 관계부처 합동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2월)
 - * (예)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등 사전예방 강화, 징벌적 손해배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배상액 상향, 기술분쟁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추진 등
- 자본시장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금융위) 기능 강화
 -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거래소)를 적극 시행하고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 확대(3→5년), 감시·제재 강화
 - * 신고기간중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 지급(최대 1억원)
 -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 실질심사 사유 확대* 및 퇴출 심사 강화 등 상장유지 적격여부 심사 강화
 - * 예) 불성실공시 누계별점이 특정수준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대상으로 편입 등
-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시장 선도사업자의 독점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AI 등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 집중 모니터링*
- * 빅데이터 관련 시장 연구용역 실시('18.上)

- 가상통화 관련 범죄 및 투기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되, 블록체인 등 新기술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균형있게 대응
 -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및 환치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미성년자·비거주자 거래금지 등 투기확산 방지
 -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가 없으면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체계* 마련
 - *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예치, 암호키 분산보관,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 가상통화 과세관련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인 과세방안 마련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
 -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 시행(4월)
 - * 집단소송 확대방안 마련('18.上),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18.下)
 - **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 배상
 - 분쟁해결기준 사전고지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의 법적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후 제도개선 추진
 - * 전자상거래법(20조3항) : 분쟁 해결기준, 분쟁처리 진행경과 및 결과 고지 등
 -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온라인 해외구매 등 국제거래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의 편의성 제고
 - * 사업자 소재국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소비자 소재국 기관에 통보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MOU 既체결 → 영국, 필리핀 등 추가)

②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및 남용을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구조 실현
 -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추진
 - *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순차적 직권조사, 기업의 자발적 시정 유도
 - ** 신고포상금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 총수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및 이사·감사의 책임성 강화**
 - *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등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사익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 추진

* 공익법인 운영현황('17.12월~)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18.2월~) 실태 점검 실시

- 대주주 전횡방지, 투자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확산 유도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18.下)

- 평가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유도

①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권고

* 필요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에 대해 기금운용평가 가점부여 검토

② 연기금·정책금융의 민간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우대 권고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현행) 5% 이상 주주는 주식 대량보유 목적 공시 의무 → 보유목적은 '단순투자'로 공시한 후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면 '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 우려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경영참여'로 보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지분율·지분 보유기간 등 고려, 정부에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검토(외감법 시행령 개정)

* (현행) 회사, 주채권은행에 한해 감사인 지정 신청 가능
(개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도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 기업지배구조 운용현황에 대한 자율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핵심원칙에 대해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

- 기업지배구조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 강화* 및 평가 기법 선진화 등 개별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평가 개선 유도

* 예) (현행) 감사위원회 구성여부 등 형식적 평가 위주 → (개선) 활동내용 등 포함

③ 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틀 확립
 - *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1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0월)
- 지역별 특화 사업을 중점지원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수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계약 제도* 도입 검토
 - * 시·도가 균형발전 사업의 내용·자원배분 등에 대해 중앙부처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앙부처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 혁신도시를 新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마련(1월)
 - 혁신도시 연계형 입지규제(예 : 용적률 제한 등) 최소구역 및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이전 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 대상 장학금 비중 확대 등 추진
- 지역 거점들을 국가혁신·산업거점·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체계화하여 지역별 혁신거점으로 육성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여 혁신 산업과 산학 협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 * 지역대학·기업·공공기관의 혁신산업 메가 프로젝트에 대하여 R&D 등 지원(‘18년 200억원 <(예) 나주 혁신산단을 테스트베드로 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 사업 수행>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산업 단지를 지역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육성
 - * 산·학·연 R&D 협의체 확대: (‘16) 85개→ (‘17) 92개→ (‘18) 100개
 - * 산학융합지구 확대 조성 : (‘17) 7개 → (‘22) 15개
 - 유희 향만, 농·임산물 등 지역 보유 자원을 활용,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특화자원의 산업화 지원
 - * (예) 해양산업클러스터, 농촌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목재·석재산업클러스터 등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 마련(~2월)
 - * 현행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8:2)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 ** 지역밀착형 기능 및 보조사업 중심으로 지방이양, 보조율 체계 개선 등 검토

- 지방 자치권 확대와 발맞추어, 지방채 시장 선진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재원조달 수단(예 : 모집공채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연구용역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 실시)
 - * 예) 발행공고 통합방안, 지방채 관련 지자체 전문성 제고방안 등 검토

4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강화

-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지원 강화
 - 그간의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 및 원가 재산정(상반기 착수)을 통해 우대수수료를 조정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 소상공인 특화자금 규모 확대* 및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 신설(200억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 * ('17년) 4,100억원 → ('18년) 4,500억원
- 민간 자율에 기반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現 5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에 관한 특례 적용, 상권구역 상생발전을 위한 보조·융자 지원 및 대규모점포·대형 프랜차이즈 등 영업 제한
 - 상권주체간 상생협약 체결을 전통시장 육성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요건으로 설정하여 상생협약 체결 적극 유도
 - *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부터 적용(1월) →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타 사업으로 확대('18.下)
 -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 공익목적 상가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에 출·융자하여 상가를 매입하고 저가 임대하는 방안 검토
 - * 부동산신탁회사,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주민자발적 조직 등
-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자생력 제고 지원
 - 대기업 및 일정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 (의무휴업일) 월 2회, (영업시간 제한) 0시~오전10시

-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 동반위 추천과정을 거쳐 정부심의·지정(업종 영세성, 통상마찰 가능성 등 심사)
- 골목상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슈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슈퍼조합 중심의 전국적 체인화 집중 지원
- * 공동브랜드·PB상품 개발, 공동구매·물류, 표준점포 개발 및 점포경영 지도 등

5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

-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
- 청년·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EITC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 * 지난 9년간 운영성과 등 평가, 연령·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수준 등 개편방안 마련('18.下)
-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역외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협력성장 생태계 확산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18.上) 등 지원체계 확립
- * 금융·판로 등 맞춤형 지원강화, 전달체계 개편, 중앙·지자체·민간 역할분담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금융 등 핵심 인프라 지속 확충
- (통계) 부처별 별도 관리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통계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여 분석기능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
-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종사자 등 기본통계 시범작성

- (금융) 사회투자펀드 조성(300억원)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1/4분기)
 - 정책자금 대출심사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재정지원 등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보 보증을 단계적으로 확대
 - * ('17.10) 108억원 → ('22) 5,000억원 규모 보증 공급 여력 확보
 - (판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18.上)
 -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사이트 확대·구축 및 협동조합 상품물과의 연계 강화
- 협동조합 생태계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확산 도모
- 협동조합 온·오프라인 경영진단 제도 도입으로 사업부진, 관리역량 저하 등 운영 애로요인 해소 지원
 - 이·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 * 관계부처·협회·전문가 회의 및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18.上)

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관리체계 개편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자율 혁신, 책임 경영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 (1단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차별화, 사회적 가치 중시 등 평가체계 개편(17년말)
 - 경영평가 결과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실질적 경영개선 유도
 - (2단계)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18년말)
 - 정부의 규정·지침 등을 대폭 정비하여 규제·간섭을 최소화 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체제로 개편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1월)
 - 채용비리 혐의자 수사·감사 의뢰, 성과급 지급률 하향조정,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 제도개선(공운법 개정)

4. 거시경제 안정

◇ 일자리 등 민생여건 개선을 위해 성장세를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1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민생여건 개선

- 국민 생활여건 개선 위한 공공투자를 2조원 확대(당초계획 대비)* 하고 대규모 국유지에 토지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사업** 추진

* 공공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0.4조원), 고속도로 건설·개량(0.2조원), 신재생 발전시설 및 발전소 안전·환경시설 개선(0.2조원), 송배전 보강(0.1조원) 등

** 시범사업 지구 예시 : 부산, 대전, 원주 소재 국유지 등

- 교통, 도시재생 등 주요 지역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①'18년 도시재생 시범사업 68개소 선정, 1.5조원 이상 투자(예산 0.8, 기금 0.7조원)
②경인고속도로 도시구간 지하화 등 지역도로 공간 입체화 시범사업 추진
③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본격 추진(~'23년 4.2조원)

-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전반의 안전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학교 내진보강 완료시한을 단축*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내화 보강 지원을 위해 안전설비투자펀드(산은·기은)** 지원대상에 포함

* 완공 소요 기간 : (포항 등 지진위험지역) 17→7년, (기타지역) 17→12년

** 펀드 운영기간을 18년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재원 추가확대 검토

- 노후 공공주택 시설개선('17:250→'18:300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보수(570억원, 신규) 등 국민안전 관련 재정투자 확대

- 복지·문화·안전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BTL 등을 통한 민자 시설간 복합화* 투자 적극 추진

* (예) 학교시설내 체육시설·도서관 복합·연계 건설,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 지자체가 신유형 복합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시 국고보조율을 10%p 가산*하여 지급

* 민투법상 대상시설을 복합화하여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 시 적용

- 복합화 시범사업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추진하고 사업 초기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KDI) 등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2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과 밀접한 국내 소비 촉진

- 평창 동계올림픽(2.9~2.25)과 이와 연계한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 '18년 겨울 여행주간을 “평창 여행의 달(2.9~3.18)”로 확대하고 평창 및 강원도 특별관광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 평창·정선 지역 관광체험단 운영, 레일시티투어 시범운영 등
 - 평창동계올림픽과 한국 및 지역문화가 반영된 축제·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올림픽 계기 문화예술행사” 개최(2월)
 - * 강원국제비엔날레 2018, 강릉재즈프레소, DMZ 평화예술제 등 프로그램 실시
 -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제한적 무비자 입국*, 복수비자 발급 확대**, 평창올림픽 전용 관광패스 혜택 확대*** 등 추진
 - * 중국인 대상 요건충족시 15일 무비자 ** 올림픽 전후 정상 출입국자 대상
 - *** '코리아투어카드 2018' 할인 업체 확대, 외국인 자원봉사자 '평창코레일패스' 할인 등
-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완료(1월)하여 설 명절 선물수요 대응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 * 과일소비 촉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24만명)들 대상 무상 과일급식 실시('18년 72억원)

3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하여 가계-기업 부담 완화 추진

- (가계) 금리상승에 대비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
 - 新DTI·DSR 도입 등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 정착, 집단·자영업자 대출 등 급증분야 집중관리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 확대('17년 45%) 및 제2금융권 고정금리 목표설정 검토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유도

- 은행권의 전국 주요지점에 도입·운영 중인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 전담창구를 '18년말까지 800개 이상으로 확대
 - * (거점점포) 서민금융상담 제공 별도점포, (전담창구) 일반점포內 별도창구
 - 서민금융 상담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소도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금융권 퇴직인력 활용,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신복위)
- (부동산)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대상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 신설(~22년, 최대 2만호)
- * ①LH SLB 리츠 ②담보권 실행유예中 채무조정 ③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
 - * (대상) 1주택 실거주자, 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다중채무자 포함

① (연체前) ①세일앤리스백(SLB) 리츠(주택기금·LH출자)가 매입 지원

- * (운영) 리츠에 감정평가액 매각→임대거주→5년후 해당시점 감정평가액에 재매입
- * (지원) SLB 리츠 운영 지원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지방세 감면도 검토)

② (연체後) 신복위 심사를 거쳐 쏘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의 담보권 실행(법원경매신청·채권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

- ②담보권 실행유예 중에도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위해 대출채권 매입·지원
 - * (채무조정 예시) 원금상환 최대 2년유예 + 30년내 상환 등
- 담보권 유예기간중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가 매각을 지원하고, ③미매각시 「금융권 공동 SLB프로그램」 통해 매입·지원
 - * (운영) SLB프로그램에 매각→임대거주→5년후 매각가에 재매입
 - *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지방세 감면도 검토)

- (기업) 자금조달 여건악화시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α) 가동, P-CBO(20조) 및 회사채 인수지원(0.6조, ~18년 산은) 프로그램 확대 검토

4 美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

- 국제금융시장·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
- 그간 뉴욕·런던 중심의 한국경제 설명회(IR)를 홍콩·싱가폴·상하이 등으로 확대 개최하여 신평사·해외투자자들과 소통 강화
- 美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소통 노력 지속
- 한·중 정상회담(17.12.13~16일)을 계기로 中 인민은행과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여 금융협력 성과 가시화

【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현안 대응 강화 】

-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G20·APEC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등을 통해 대응
 -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무협) 등 통해 민간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코트라, 업종별 단체, 전문가 등 참여

**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세미나, 교육 실시, 해외기술규격 맞춤형 R&D 지원 등

-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 및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균형이 잡히도록 대응
 -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은 공청회 개최(1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차질없이 추진
 - 한-중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對中 교역·투자 등 애로사항 해소 및 對中 수출품목 경쟁력 향상 지원
 -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 등을 통해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한-중 협력관계 구축
- * 一帶一路 구상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원/위안화 직거래 활성화 등

5. 중장기 도전 대응

- ◇ 미래 변화 요인을 점검하여 종합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1 미래대비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및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미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한 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추진

【 4대 전략과제 】

- ① 장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혁신 전략
- ②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산업생태계·과학기술·교육 혁신 전략
- ③ 세계경제질서, 무역구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외통상전략
- ④ 양극화·사회갈등 심화에 대응한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확충 전략

- 민간전문가 중심 중장기전략 작업반을 구성하고, 컨퍼런스·세미나·정책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 일자리, 주거, 출산·육아, 생활·여가 등에 대해 청년들이 정책제언을 하는 권역별(서울·부산·광주·대전) '미래세대와의 대화 미래콘서트' 개최('17.12~'18.2월)

- 경제사회 트렌드 전망, 미래 예측 방법론 연구 등 미래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KDI에 「미래전략 전담부서」 구성·운영

-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

- 지출구조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및 생산성 제고 노력 병행
 - 4대 중점 분야*, 33개 지출구조혁신 과제**에 대해 ①보상체계혁신, ②전달체계개선, ③사업구조개편, ④금융·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
 - * ①혁신성장, ②복지·고용안전망 확충, ③저출산 극복, ④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쌀 산업 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등
 - ※ 연초(1월 잠정) 구체적 방안 확정 발표, '19년 예산 및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재정의 효과성 제고 위해 정책평가 및 전달방식 개선 추진
 - 인과관계 실험 결과를 근거로 신규정책 도입여부·방식을 결정하는 “Policy-lab” 시범사업 선정·추진
 - * 美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 활용한 Evidence-based policy(실험적 증거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검증하고 예산에 환류)체계를 벤치마킹
 - ** 핀란드는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月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 실시('17.1월) → 빈곤감소, 고용창출 등에 대한 영향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
 - 국민의 자발적 행동변화 유도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넛지(Nudge) 정책 적극 도입·활용
 -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통해 시범사업 선정 후 관련 연구용역 통해 정책화, 사업 시행 (예: 초등학교 건널목 근처 발자국 마크 표시 → 교통사고 30% 감소, 경기지방경찰청)

②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생애 (Life-cycle)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애로요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혼인·출산 단계 】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 희망타운 7만호,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민영 10→20% 등)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보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상품 신설
- * (구입) 금리 최대 △35bp (전세) 금리 최대 △40bp,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
-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혼인가구 대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 * 동거가구의 차별 현황 파악 및 차별해소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양육 단계 】

- 아동수당(0~5세, 월 10만원, '18.9월~) 지급 등으로 초기 양육부담 경감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 도입·확산
- * (i)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사업주가 되어 여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모델 개발
(ii) 산단내 유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한 은행-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사례 전파
(예 : IBK는 현재 시화공단, 남동공단, 대구 성서공단 등에 설립 중, 내년 완공예정)
(iii)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 검토
-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시범운영)
- *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
- 기업의 근로문화 혁신 유도를 위해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정부기관은 근로혁신 관련 지표 대외공개('18~)
- * 총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등 평가 → 홍보, 포상, 재정, 근로감독 등 혜택 부여
< ('18) 모델개발 → ('19) 정부·공공기관 시범실시 검토 → ('20) 민간 확산 >
-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구구조 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18)
- 기존 사업들을 종합평가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보완하고,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투자

③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지원 등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여성의 직업경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6년 52.1%)을 '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55.3%) 제고

【 경력단절 사전예방 】

-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추진
 - * (개편안) 통상임금의 40→50%, 상한액 100→120만원, 하한액 50→70만원
- 여성이 육아기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60→80%)
 - * (현행)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기간 = 1년-육아휴직 기간 → (개선)현 수준의 2배로 확대
-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 개선**(現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자발적 퇴직시까지 지원)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내 **경단여성 특화 과정**을 도입(진단도구·매뉴얼 개발)하고, **폴리텍의 신기술·창업교육 등 여성 특화 과정 확대**
- 경단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을 확대***하고 **중장년 경단여성 참여가 높은 가사·돌봄서비스 고용지원 강화****
 - * (대상) 중소 →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10% → 중소 30% / 중견 15%
 - ** 직접고용, 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정부지원 등 가사·돌봄 서비스 제도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여성 창업을 패키지 지원

【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

- 고용평등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범위를 쉐어업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 강화***
 - * 지방관서별로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모집·채용상 성차별 조사 등
- 임금·승진·해고 등에 대한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시정별적 손해배상제(3배까지) 도입

4 다층적 노후보장체계 구축, 소득지원 등 통한 노인빈곤 완화

-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국민연금 재정계산('18년)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추진
 - * (i)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기간 지속 확대
(ii)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현행 99.5만원)
(iii) 본인·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 확대(본인연금 + 유족연금 30% → 50%)
 - 국민연금 운용개선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 투자·자산내역 공시 강화 등 추진
- 공적연금 보완을 위해 사적(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추진
 -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해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1년 미만 근속자 퇴직연금 적용 등 검토
 - *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現 :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가능)
**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관리, 가입사업주 대상 재정지원 병행
 - 연금펀드·연금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을 일반펀드 등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재정을 통한 소득지원 확대
 - 기초연금 인상(20→25만원) 등으로 노인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기초생보(수급자의 27%가 노인) 급여산정 기준의 적정성 및 지역별 형평성 강화 등을 위해 기본재산액 개선방안 검토
 - * (예) 전세가 상승 반영, 지역별 구분 세분화 등 연구용역 추진
- 고령층 실물자산 유동화 촉진을 통한 소득확충 지원
 - 농지연금의 자산유동화 등 안정적 지급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입연령·감정평가율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

V. 2018년 경제전망

- **[성장]** 세계경제 개선,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소비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며 연간 3.0% 성장 예상
 - 경상성장률은 소비자물가 및 수출단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 상승폭이 축소되며 연간 4.8% 성장 예상
 - *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 환율 지속 전제시 32,000불 예상
- **[고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은 '17년과 유사한 32만명 예상
 - 고용률(15~64세)은 '17년보다 0.7%p 개선된 67.3% 예상
- **[물가]** 유가·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상방요인이 금년보다 큰 폭 완화되며 연간 1.7% 상승 전망
- **[경상수지]** 서비스 적자폭은 소폭 축소되나, 유가 상승,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790억불로 축소
 - 수출입은 단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17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며 수출 4.0%, 수입 6.0% 증가 예상

2018년 경제전망

	2017년	2018년
▪ 경제성장률(%)	3.2	3.0
< 경상성장률(%) >	5.7	4.8
< 1인당 국민소득*(천불) >	29.7	32.0
▪ 취업자증감(만명)	32	32
고용률(% , 15~64세)	66.6	67.3
▪ 소비자물가(%)	1.9	1.7
▪ 경상수지(억불)	810	790

* 환율은 현재 환율(12.21, 1,083원/달러)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I. 최근 경제동향과 2017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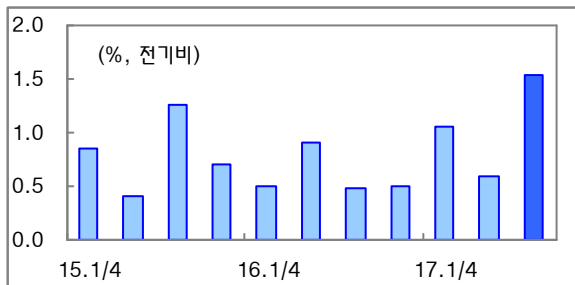
1. 경제성장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 예상

◇ [성장] 수출 · 투자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며 '17년 3.2%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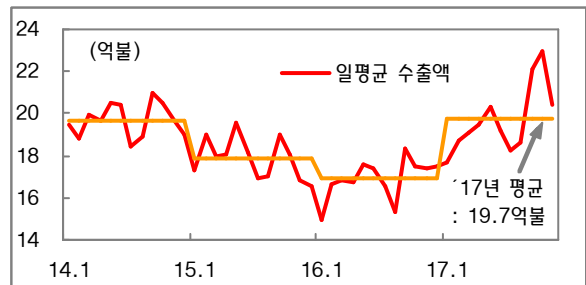
- (실질성장률) 하반기 회복세 확대로 당초 전망치(3.0%) 상회 전망
 - 특히, 3/4분기는 세계경제 개선,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 · 정부부문이 크게 기여하며 7년 만에 가장 높은 1.5% 성장
 - 4/4분기는 3/4분기 호조 및 장기 연휴 등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 받겠으나, 수출 중심의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

GDP 성장률



* 출처 : 한국은행

수출 추이(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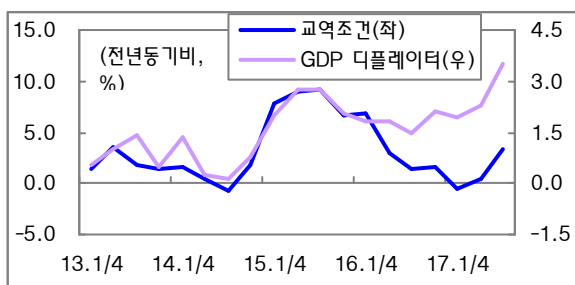
* 출처 : 관세청, 선박제외 수출 기준

- (GDP 디플레이터)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소비자물가를 상회하는 연간 2.4% 상승 예상

* 소비자물가(전년비, %): ('17.1/4)2.1 (2/4)1.9 (3/4)2.3 (10)1.8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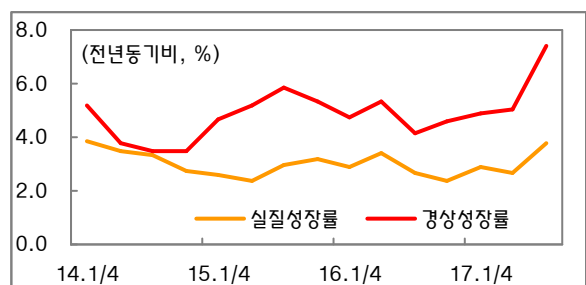
- (경상성장률) 3/4분기까지 5.8% 성장하며 '17년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4.6%)을 상회하는 5.7% 성장 예상

교역조건과 GDP 디플레이터



* 출처 : 한국은행

경상성장률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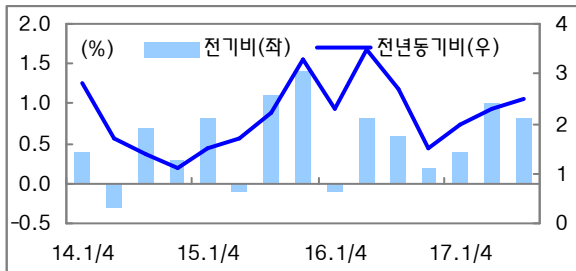
◇ (민간소비)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가운데 연간 2.4% 증가 예상

- 내구재를 중심으로 그간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회복세가 아직까지 견고하지 않은 모습

* 가전제품 판매(전년동기비, %) : ('17.1/4) 8.4 (3/4) 24.1 (3/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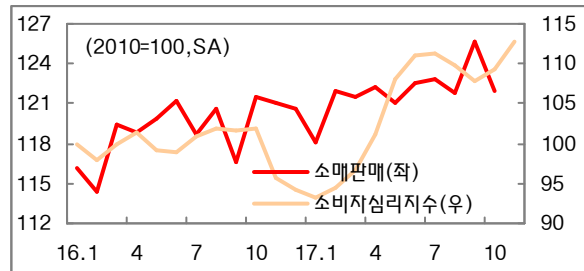
* 통신기기 판매(전년동기비, %) : ('17.1/4)△3.5 (2/4) 9.8 (3/4) 9.1

민간소비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지수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 해외소비는 환율 안정 및 연휴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

* 거주자 해외소비(전년동기비, %) : ('17.1/4) 14.5 (2/4) 11.8 (3/4) 2.3

◇ (설비투자) 수출 증가, IT업황 호조 등으로 14.1%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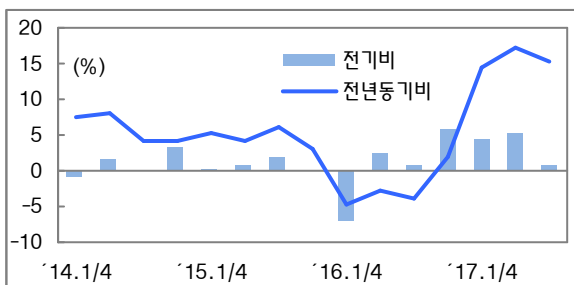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글로벌 IT업황 호조 등으로 기업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큰 폭 증가세

- 기계류 투자는 대규모 반도체 장비 도입 등으로 큰 폭 증가 하였으나, 운송장비 투자는 선박 투자 감소 등으로 부진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전년동기비, %) : ('17.1/4)114.7 (2/4)202.2 (3/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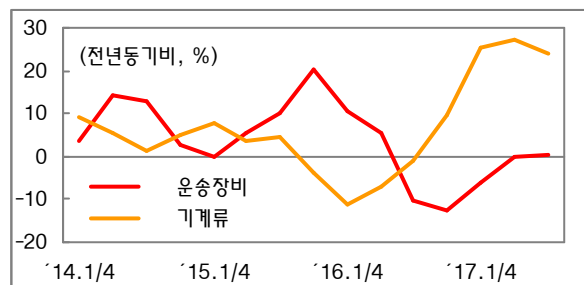
* 선박 수입(전년동기비, %) : ('17.1/4)5.9 (2/4)△30.4 (3/4)△19.6

설비투자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형태별 설비투자



* 출처 : 한국은행

◇ [건설투자]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7.6% 증가 예상

- 건물건설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착공면적 감소·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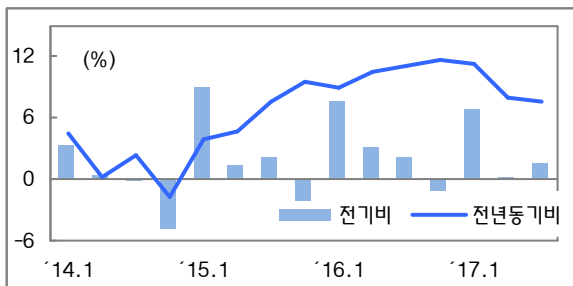
* 건축착공면적(전년비, %) : ('16)△5.7 ('17.1/4)0.3 (2/4)△19.5 (3/4)△8.7

* 준공물량(만호) : ('14)43 ('15)46 ('16)52 ('17^e)59

- 토목건설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조정 등으로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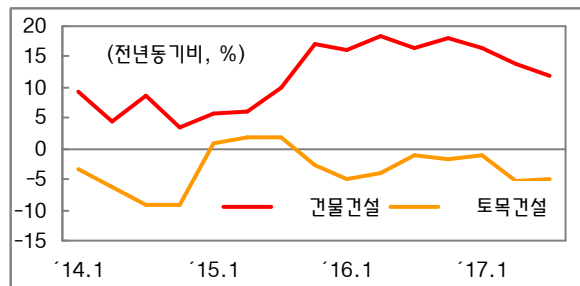
* SOC 예산(조원) : ('14) 23.7 ('15) 26.1 ('16) 23.7 ('17)22.1(△6.6%)

건설투자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형태별 건설투자



* 출처 : 한국은행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IT업황 호조 등으로 3.0% 증가 예상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IT 업황 호조, 신산업(빅데이터·클라우드 등) 활성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생산 증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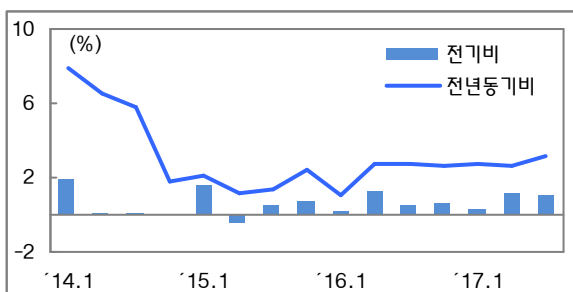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생산지수(전년동기비, %) : ('14) 5.2 ('15) 1.3 ('16) 1.5 ('17.1~10) 3.4

- 정부부문은 R&D 예산 증가세 둔화 등으로 미약한 흐름 지속, 민간부문은 매출액 증가 등으로 회복세 시현

* R&D 예산(조원) : ('14) 17.8 ('15) 18.9 ('16) 19.1 ('17)19.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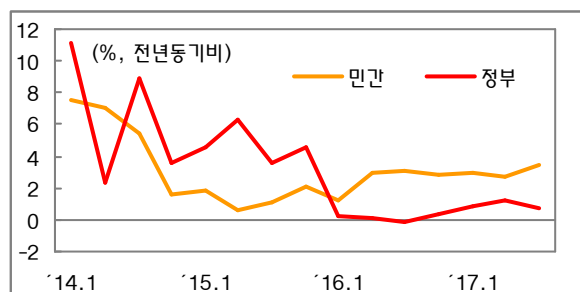
* 기업매출액증가율(% , 한은) : ('16.4/4)0.8 ('17.1/4)7.9 (2/4)8.0 (3/4)13.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 한국은행

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 한국은행

2. 고용

'17년 취업자는 32만명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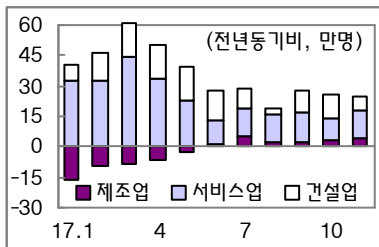
◇ [취업자수] 하반기 들어 증가세 둔화, 청년 고용 여건 악화

- 취업자가 32만명 수준 증가하며 '16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7.1/4) 36.0 (2/4) 36.7 (3/4) 27.9 (10~11월)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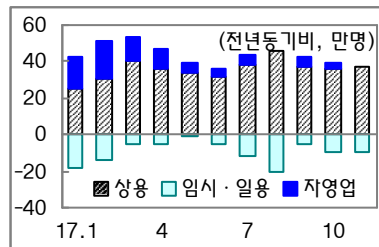
-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제조업은 수출 호조 등으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는 둔화
-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증가폭 축소, 임시직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영세 자영업자는 '16년 하반기 이후 지속 증가
- 고령화 등으로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반면, 청년 취업자는 신규채용 위축, 미스매치 등으로 감소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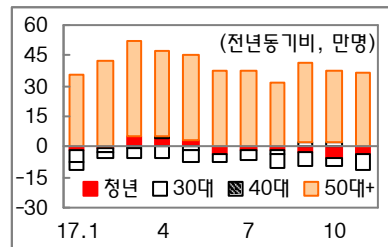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 출처 :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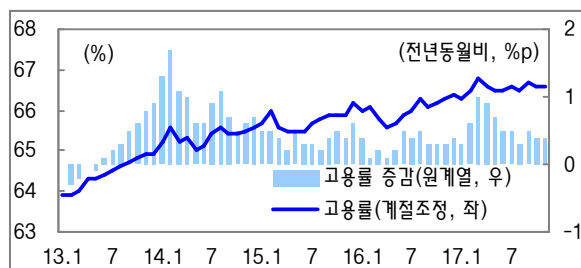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 [고용률·실업률] 고용률 상승,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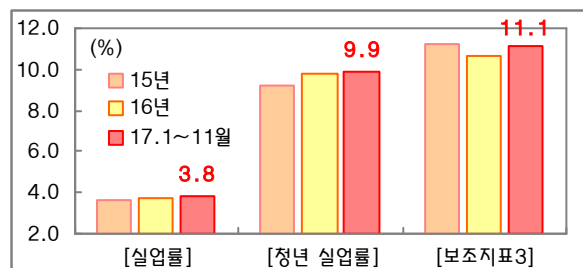
- 여성·장년·청년층 등 구직활동 확대에 경찰·고용률 동반상승세
-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청년 중심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증가 등으로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 상승

고용률(15~64세)



* 출처 : 통계청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



* 출처 : 통계청

3. 물가와 주택시장

물가 · 주택시장 모두 안정세

◇ [소비자물가] '17년 1.9%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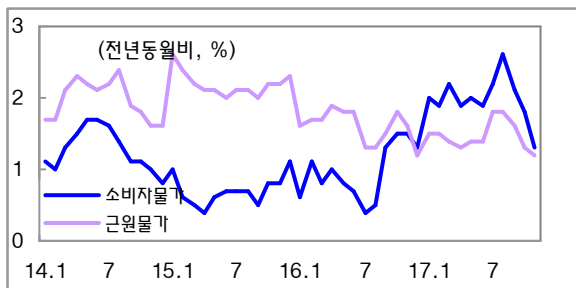
- 폭우·폭염, 조류독감(AI)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1.9% 상승 전망

* 유가(두바이유, \$/B): ('16) 41 ('17.1~11) 53(전년비 29% ↑)

- 농산물 ·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대 중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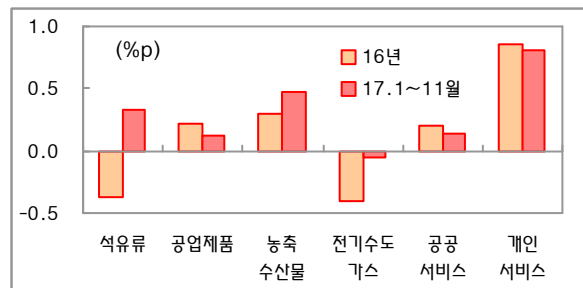
* 근원물가 : ('16)1.6 ('17.1/4)1.5 (2/4)1.4 (3/4)1.7 (10~11)1.3

소비자물가



* 출처 : 통계청

품목별 기여도



* 출처 : 통계청, 공업제품은 석유류 제외

◇ [주택시장] 매매시장 · 전월세시장 모두 안정세

- 주택 매매시장은 전년대비 가격상승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8.2대책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과열이 진정되며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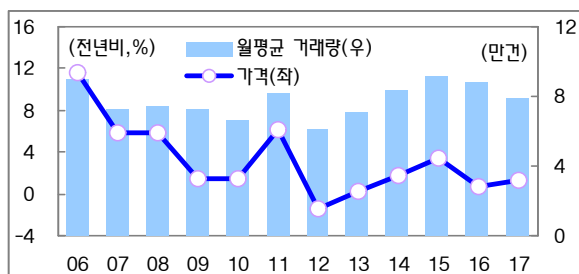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가격(전월비, %): ('17.6) 1.0 (7) 0.5 (8) 0.6 (9) △0.01 (10) 0.3 (11) 0.4

-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월세가격은 전→월세전환 등에 따른 공급증가로 하향 · 안정세

* 전세가격(전년동기비, %) : ('14) 3.4 ('15) 4.8 ('16) 1.3 ('17.1~11)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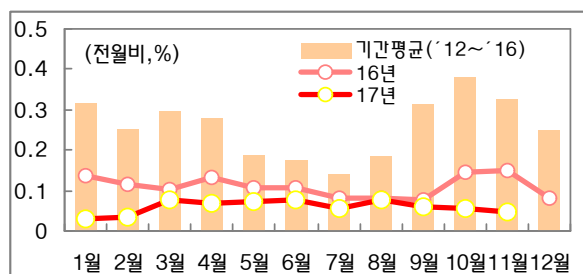
월세가격(전년동기비, %) : ('14) △1.7 ('16) △0.17 ('17.1~11) △0.29

주택 매매가격과 월평균 거래량¹⁾



주1) '17년은 1~11월 * 출처 : 국토부, 감정원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출처 :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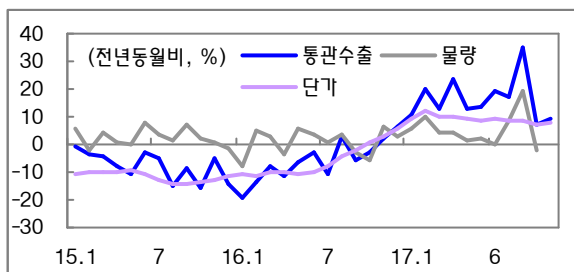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수출입 반등, 경상수지 흑자 축소

◇ (수출입) 연간 통관 수출 15.8%, 수입 17.6%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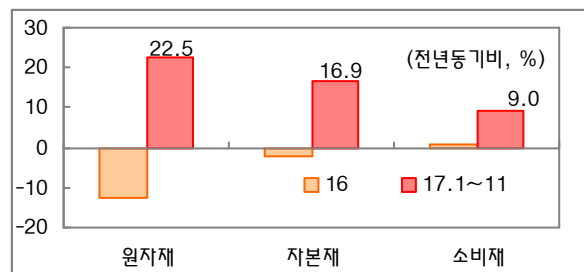
- 수출은 세계경제 · IT 호조 등으로 단가 · 물량 모두 개선
 -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선박 · 석유류 등 대부분 주력품목이 증가하였으나, 휴대폰은 감소세
 - * 품목별 수출('16→17.1~11, 전년비, %) : (반도체)△1.1→56.6 (석유제품)△17.3→31.5 (유화)△4.3→23.7 (선박)△14.6→24.2 (철강)△5.5→21.0 (휴대폰)△9.0→△24.5
 - 지역별로는 아세안 · EU · 중국 · 일본 · 미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對중동 수출은 부진 지속
 - * 지역별 수출('16→17.1~11, 전년비, %) : (아세안)△0.4→27.6 (EU)△3.1→18.9 (中)△9.3→14.2 (日)△4.8→10.1 (美)△4.8→4.3 (중동)△13.8→△5.7
- 원유 · 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상승,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등으로 원자재 ·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재 수입도 확대

통관수출과 수출물량·단가



* 출처: 관세청, 한국은행

품목별 수입



* 출처: 무역협회

◇ (경상수지) 전년 대비 줄어든 810억불 흑자 예상

- 서비스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축소
 - 상품수지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등 상품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대비 소폭 감소 전망
 - * 1~10월 상품수지 증감(전년비, 억불) : △5.2 [(상품수출)574.6 (상품수입)579.8]
 - 서비스수지는 中 관광객 감소, 해외건설 수주 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여행 · 건설 · 운송수지 중심 적자폭 확대
 - * 1~10월 서비스수지 증감(전년비, 억불) : (전체)△122.4 (여행)△57.8 (운송)△34.3 (건설)△10.1 (가공)△6.7 (지재권)7.5

Ⅱ. 2018년 대외여건 점검

1.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나, 리스크 요인 상존

◇ [성장] 선진국·신흥국 동반 회복세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 지속

- 미국은 고용여건 호조 및 세제 개편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투자 등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 美 실업률(계절조정, %) : ('14) 6.2 ('15) 5.3 ('16) 4.9 ('17.11) 4.1

-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 및 정책 불확실성 등은 하방 요인

- 유로존은 고용시장 개선, 심리 호조 등으로 소비·투자 등이 증가하며 회복세 지속 전망

* 유로존고용지표(% , '15→'17): (실업률)10.9→9.2(~10월) (장기실업비중)51.6→49.5(~6월)

* 경기체감지수(ESI, 장기평균=100): ('14) 101.4 ('15) 104.2 ('16) 104.8 ('17.11) 114.6

- 일본은 세계교역 회복, 도쿄 올림픽 대비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중심의 완만한 성장 전망

- 중국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심리 등 소비여건이 개선되며 안정적 성장 예상

*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전년누계비, %) : ('16)6.3 ('17.1/4)7.0 (2/4)7.3 (3/4)7.5

- 여타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안정,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브라질·인도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실 적			전 망			
	'17년			'17년 연간		'18년 연간	
	1/4	2/4	3/4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	-	-	3.6	3.6	3.7	3.7
미 국(전기비연율)	1.2	3.1	3.3	2.2	2.2	2.3	2.5
유 로(전기비)	0.6	0.7	0.6	2.1	2.4	1.9	2.1
일 본(전기비)	0.4	0.7	0.6	1.5	1.5	0.7	1.2
중 국(전년동기비)	6.9	6.9	6.8	6.8	6.8	6.5	6.6
브라질(전년동기비)	△0.0	0.4	1.4	0.7	0.7	1.5	1.9
러시아(전년동기비)	0.5	2.5	1.8	1.8	1.9	1.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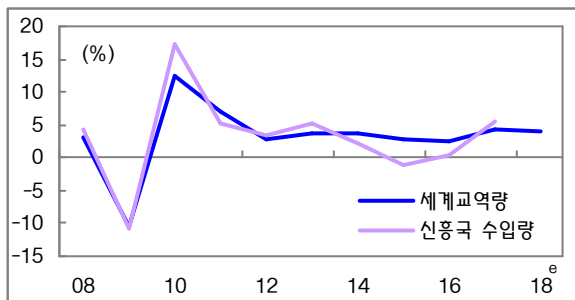
◇ [교역량 · 물가] 양호한 세계교역 회복세 및 低물가 기조 지속

- 세계교역량은 신흥국 등 수입수요가 확대되며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제약 요인

* 세계교역량(% , IMF, '17.10) : ('15) 2.8 ('16) 2.4 (17) 4.2 (18^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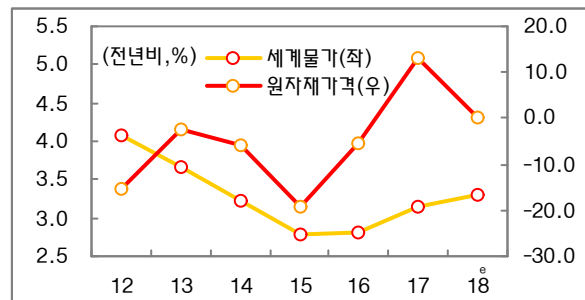
- 세계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안정적 흐름 지속

세계교역량 증가율 추이



* 출처 : IMF(세계), CPB(신흥국)

세계물가와 원자재 가격



* 출처 : IMF

◇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 美 금리인상 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화부채 부담 가중, 신흥국 자본유출 등으로 일부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비금융기업 부채 변화

(GDP 대비, %)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니	말련
'08.3/4	96.4	38.8	39.9	15.3	58.1
'17.2/4	163.4	41.6	51.6	22.6	68.0

* 출처 : BIS

- 중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둔화 가능성, 과잉설비 산업 구조조정, 기업부채 조정 등이 하방리스크

* 고정자산투자(전년동기비, %) : ('17.1/4) 9.2 (2/4) 8.6 (3/4) 7.5 (4/4) 7.3

- 유로지역은 브렉시트(Brexit) 관련 통상관계 협정체결 지체*,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독립요구 등 불확실성 상존

* 브렉시트 이후 영국-EU간 통상관계의 형태, 세관통관 등에 대한 협상

- 주요국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시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둔화 가능성

2. 국제원자재가격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 (국제유가) '18년 평균 55\$/B 예상(두바이유 기준)

- '18년 국제유가는 감산연장*,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완만히 상승하며 '17년보다 높은 55\$/B 기록 전망

* OPEC 등 산유국은 180만 b/d 감산협약(당초 '18.3월말 종료)을 '18.12월까지 연장

** '18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17.7월 → 12월, OPEC) : 9,765만 b/d → 9,845만 b/d

- 다만, 美 셰일오일 생산증가가 감산효과를 상쇄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 및 감산이행률 하락 등 상·하방 리스크 상존

* 美 생산량은 '17년말 982만 b/d(사상 최고치)까지 확대 '18년말 1,015만 b/d 기록 전망(CERA)

주요 기관들의 '18년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5	'16	'17		'18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에경연('17.11월)	Dubai	51	41	53	58	55	54	54	56	57
CERA('17.12월)	Dubai			52	54	54	56	54	54	54
EIA('17.12월)	Brent	54	45	54	60	57	57	57	56	59

◇ (국제곡물 · 비철금속) 완만한 상승세, 다만 불확실성 상존

- (국제곡물) 재고감소, 남미 파종지연 등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나, 향후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

* 세계 곡물 재고율(% 기말재고/기간소비, 美 농무부) : ('16) 25.7 ('17) 25.4 ('18) 24.8

- (비철금속) 신흥국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중국 등 주생산지의 공급차질* 등으로 완만한 가격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 환경규제로 알루미늄 제련소 가동을 축소 예상

국제곡물·비철금속 가격 상승률 전망

(전년비, %)	옥수수	밀	대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16년	△6.3	△22.9	+4.4	△3.6	△11.7	△19.1	+8.2
'17년	△2.2	+4.1	△2.8	+21.4	+23.9	+4.0	+34.1
'18년	+4.2	+12.1	△1.5	+6.5	+6.6	+5.1	+4.4

* 출처 : IMF('17.10월)

3. 국제금융시장 전반적인 안정 기조, 다만, 불안요인 잠재

◇ [시장 지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주가) 세계경제 회복 등 상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간 증시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 증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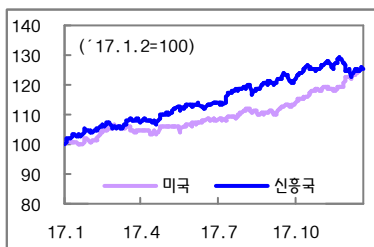
* '16년말 대비 상승률(17.12.21, %): (美)25.4 (유럽)8.5 (日)19.6 (中)6.3 (韓)19.9

- (환율) 향후 경기·물가 여건 변화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조정속도 차이 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 (금리) 美 연준 등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나, 향후 인플레이션 향방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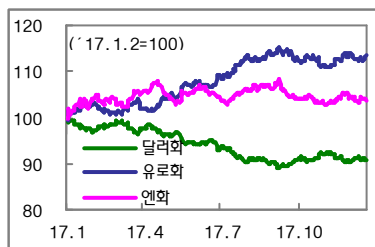
* 美 연준 금리인상, 물가상승률 부진 등으로 美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

주요국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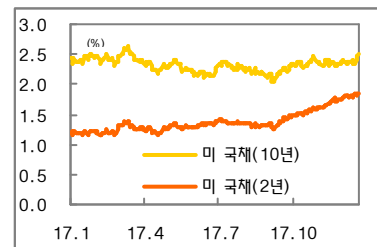
* 출처 : Bloomberg

주요국 환율



* 출처 : Bloomberg, 위상향시 절상

주요국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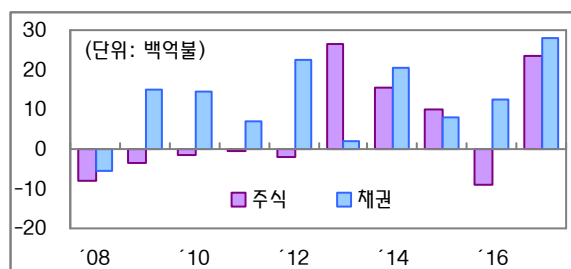


* 출처 : Bloomberg

◇ [자금유출입] 신흥국 자금유입 추세 지속, 변동성 확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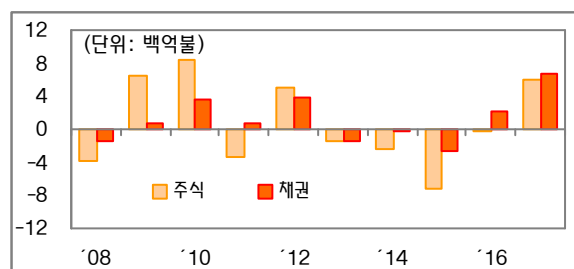
- 최근 경기 회복, 저물가 등으로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 향후 美 금리, 달러화 강세 여부, 중국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신흥국으로의 자금흐름 변동성 확대 가능성

선진국 자금유출입 변화



* 출처 : EPFR

신흥국 자금유출입 변화



* 출처 : EP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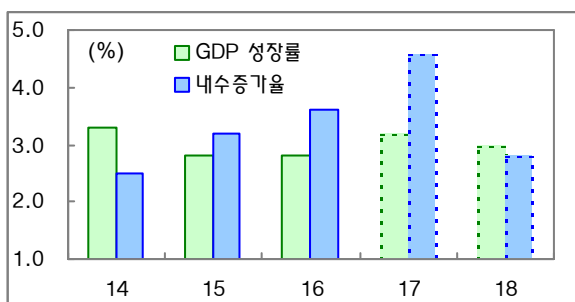
Ⅲ. 2018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실질 GDP] 연간 3.0% 성장 전망

- (성장흐름) 회복세가 이어지며 연간 3.0% 성장 전망
 - 상반기는 평창 올림픽, 통상현안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하반기는 반도체 단가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둔화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다소 완만해질 전망
- (성장구성) 투자가 둔화되나, 소비·수출은 회복 예상
 - 내수는 설비투자(기저 영향) 증가폭 축소 등으로 '17년보다 기여도는 감소하나, 정책효과에 따른 소비 개선이 보완
 - 수출은 통관 기준(금액)으로는 증가폭이 축소되나,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물량 중심의 회복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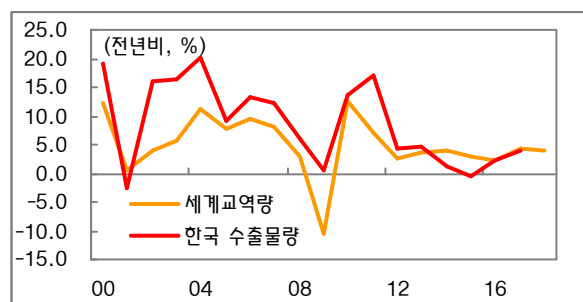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 출처 : 한국은행

** '17~'18은 정부전망

세계교역량과 수출물량 추이



* 출처 : IMF, 한국은행

◇ [경상 GDP] 연간 4.8% 성장 전망

-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단가 상승폭 축소, 유가 상승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7년보다 둔화된 1.7% 전망
 - 경상성장률은 '17년(5.7%)보다 둔화된 연간 4.8%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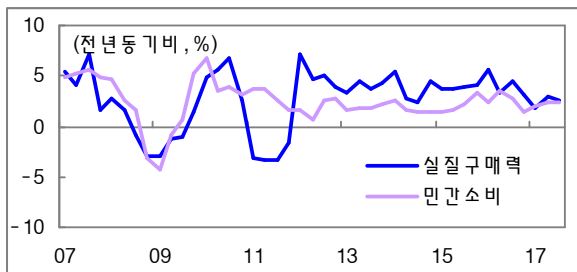
◇ (민간소비) 연간 2.8% 증가 예상

- (소득여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며 실질구매력 증가 예상

* 기초연금 인상 : 65세 이상(소득 하위 70%)에 월 5만원 추가 지급 (예산 10조원)
아동수당 지급 : 0~5세 아동 대상(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월 10만원 지급 (예산 0.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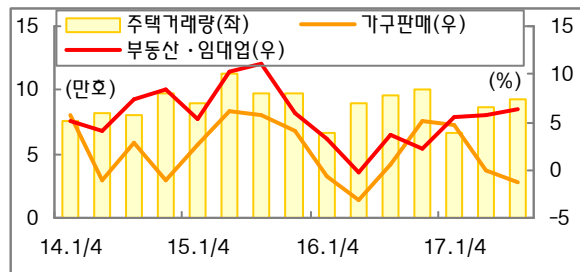
- (자산여건) 거래량 위축 등 주택경기 조정,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 불확실성은 관련 소비지출 제약 요인

가계 실질구매력¹⁾과 민간소비



주1) 실질구매력 = 실질임금 × 취업자수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주택거래량과 관련 소비·서비스업



* 출처 : 한국감정원,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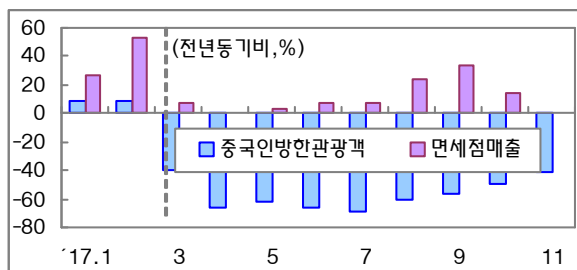
- (기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소비심리 제약요인이나, 최근 한중 관계 개선 등은 국내소비에 긍정적 영향

* 소비자심리지수 : ('17.3)96.7 (6)111.1 (9)109.9(9.3일 핵심지수) (11)112.3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여건 개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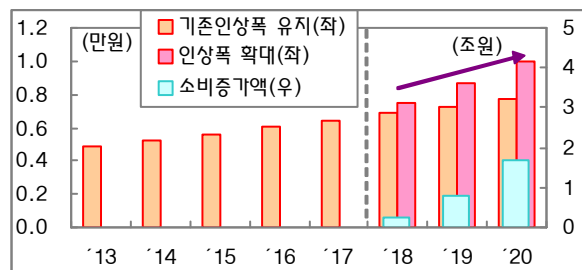
* 평균소비성향('16년, %) : (전체) 71.1 (1분위) 105.6 (5분위) 59.9

중국인 방한 관광객 추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관세청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증가액 추정



* 출처 : KDI, 가계소득 증가효과만 감안하여 추정

- ('18년 전망) 실질구매력 개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17년(2.4%)보다 높은 2.8% 증가 전망

◇ [설비투자] 연간 3.3%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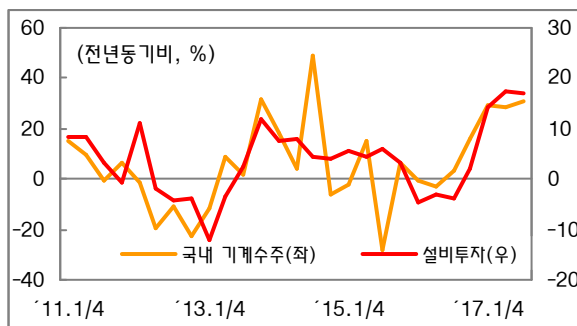
○ (투자여건) 글로벌 IT업황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 양호한 여건이 지속되나,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 제약요인 상존

-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IT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며 투자 여건 개선

* 매출액영업이익률(% , 한은) : ('16.4/4)5.2 ('17.1/4)7.0 (2/4)7.2 (3/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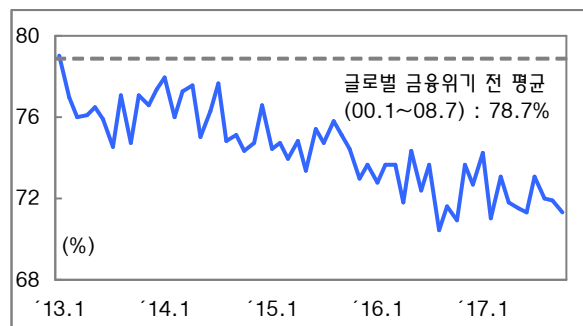
- 다만, 제조업 가동률 하락,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은 설비투자에 부정적 요인

설비투자와 기계수주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제조업 평균 가동률



* 출처 : 통계청

○ (업종별 여건) IT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세 지속 예상

- 낸드플래시 · OLED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로 IT 부문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5G 상용화 관련 통신업 투자도 확대 전망

* 시장 전망('17→'18년, 십억불, IHS): (낸드플래시)50→54 (디스플레이)23→29

* 5G(5세대이동통신)는 '19년 상반기 중 상용화 계획(과기정통부)

- 다만, 조선 ·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 등은 보수적 투자 예상

* 설비투자계획(산은, 조원, '16→'17→'18) : (조선)1.3→0.9→1.0 (철강)1.8→1.8→1.7

○ ('18년 전망) 수출 회복세 · IT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나, '17년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둔화(3.3%)

◇ [건설투자] 연간 0.8% 증가 전망

○ (주택건설) '15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준공으로 이어지며 주택건설 증가세는 점차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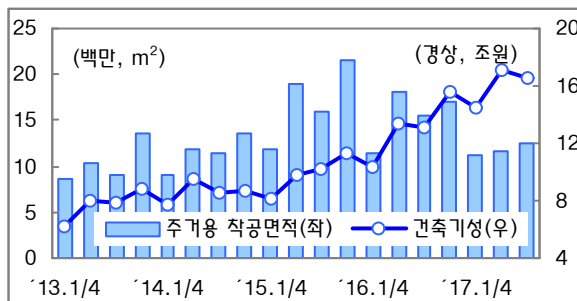
- '17~'18년 분양물량 감소,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건물수주 및 주택착공면적 등 선행지표 부진 등도 건설투자 제약요인

* 분양물량(만호, 주산연) : ('15) 52.6 ('16) 46.9 ('17^e) 35.8 ('18^e) 32.1

** 주거용 건물수주(전년동기비, %) : ('16.4/4)29.7 ('17.1/4)2.6 (2/4)△2.7 (3/4)△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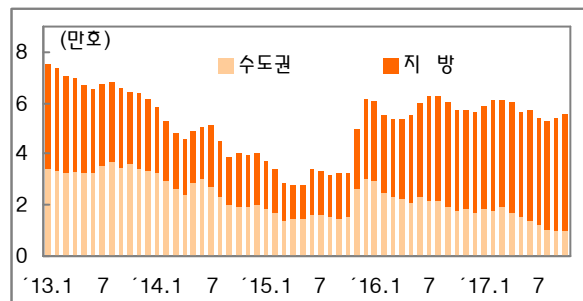
- 다만, 높은 수준의 '16년 분양물량,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 사업 투자 확대 등으로 주택건설은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주택착공면적과 건설기성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청

미분양 주택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 (비주거용 건물건설) IT업황 호조에 따른 반도체 공장 신설, 상업용 건물 공실률 하락 등은 상방요인

*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 : ('16.4/4)13.0 ('17.1/4)11.5 (2/4)12.4 (3/4)12.0

- 다만, 비주거용 건물의 착공면적 감소, 평창올림픽 관련 공사 마무리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

*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전년동기비, %) : ('17.1/4)2.1 (2/4)△6.5 (3/4)△0.8

○ (토목건설) SOC 예산 감소 등에 따른 토목건설 감소를 공공기관 투자 확대가 일부 보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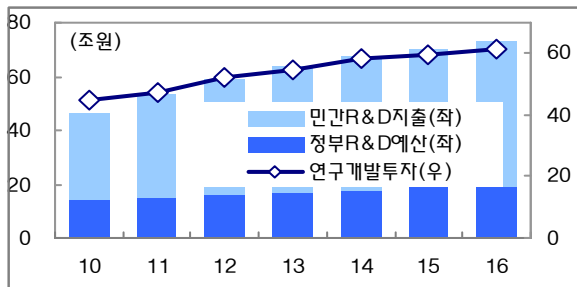
* SOC 예산(조원) : ('16) 23.7 ('17) 22.1 ('18) 19.0 (전년비 △14.2%)

○ ('18년 전망) 건물건설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토목건설 감소세가 이어지며 0.8% 증가 예상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3.5%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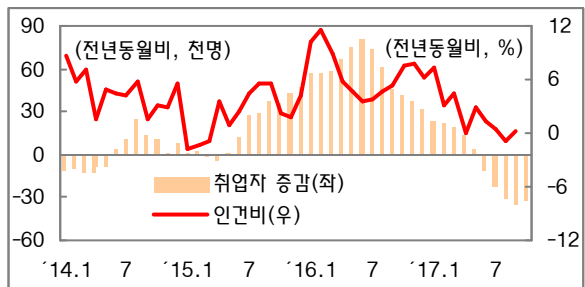
- (R&D투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민간 R&D는 기업 수익성 개선, 글로벌 IT 업황 호조, 기업 연구소 확대 등에 힘입어 점진적 투자 증가세 예상
 - * 기업연구소(만개, 기말기준) : ('13)2.9 ('14)3.2 ('15)3.5 ('16)3.8 ('17.11)3.9
 - 다만, 최근 연구인력 취업자·인건비 감소, 정부 R&D 예산 증가세 둔화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예상
 - * R&D 예산규모(조원) : ('15) 18.9 ('16) 19.1 ('17) 19.5 ('18)19.7(1.1%↑)

정부, 민간 R&D 지출과 R&D 투자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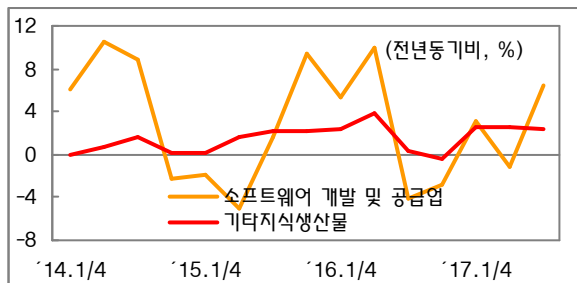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고용노동부 ** 3개월 이동평균

-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수요 확대 등으로 투자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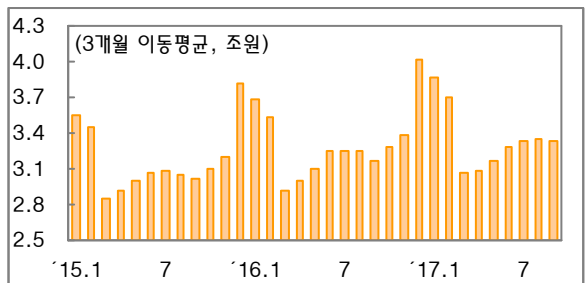
* 국내 SW 시장 성장률(IDC, %) : ('14)2.0 ('15)2.9 ('16)2.0 ('17^e)2.3 ('18^e)2.5

기타지식재산생산물과 S/W 개발업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소프트웨어 생산량 추이



*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18년 전망) 반도체 등 IT업종의 R&D투자와 4차 산업혁명 관련 SW 투자를 중심으로 '17년(3.0%) 보다 개선된 3.5% 증가 전망

2. 고용 : 취업자 32만명 증가 전망

◇ [노동수요] 일자리 정책효과 등이 수요회복을 뒷받침

- (기업 인력사정) 기업들의 인력부족 전망 확대, 창업 활성화 등으로 신규 구인수요는 완만한 회복세 예상

* 신설법인 증감(전년동기비, 백개) : ('17.1/4) 4.5 (2/4) △0.6 (3/4) 5.9

* 전산업/제조업 구인인원(만명) : ('16.上) 82/16 (下) 70/15 ('17.上) 8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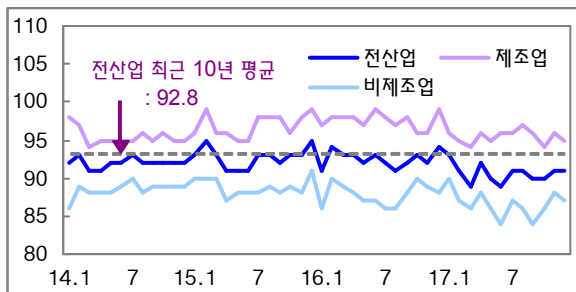
- (산업별) 건설업은 주택건설 완만한 둔화 등으로 인력수요 감소되나, 제조업은 수출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개선 전망

- 서비스업은 수요가 확대되는 보건·복지업 중심의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숙박·음식업 과당경쟁 등은 제약요인

* 보건·복지업 취업자(전년동기비, 만명) : ('17.1/4) 8.0 (2/4) 5.7 (7~11) 6.2

* 숙박·음식업 취업자(전년동기비, 만명) : ('17.1/4) 5.7 (2/4) 0.9 (7~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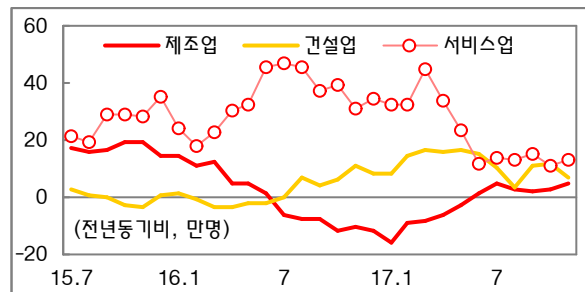
인력사정전망 BSI¹⁾



주1) BSI지수가 높을수록 인력과잉 의미

* 출처 :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출처 : 통계청

- (기타)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 등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 본격화로 추가적 수요창출 기대

* 보건·복지·노동예산(조원) : ('17)129.5 → ('18)144.7<일자리 17.1 → 19.2>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4년) : (전산업)12.5 (사회복지)41.0 (보건의료)14.4

- 현장·민생공무원 증원(+2.7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2.5만명) 및 노인일자리 확대(+7.7만명) 등 직접 일자리 창출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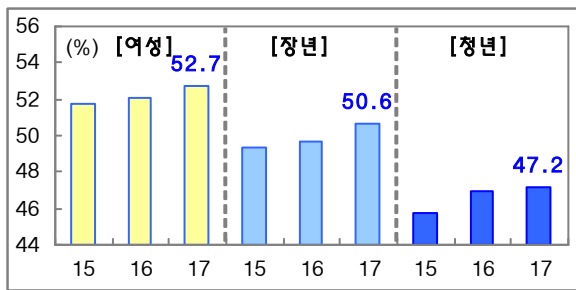
- 공공부문 조기채용 및 일자리 사업 조기시행 등도 긍정적 요인

◇ [노동공급] 여성·청년·장년층 중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속

- '1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17년 △0.7 → '18년 △4.6만명) 되며 취업자 증가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여성 맞춤형 지원 정책, 장년층(55세 이상) 노동시장 잔류 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노동공급 위축을 보완
 - 에코붐 세대('91~'96년생,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본격 진출로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나며 구직경쟁 심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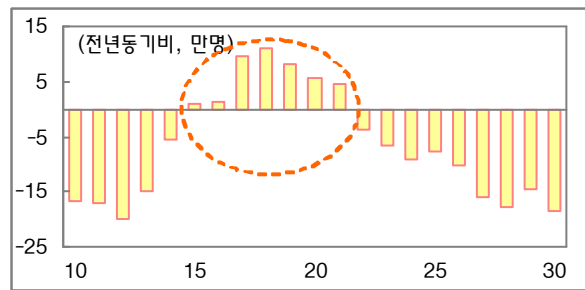
* 청년 경제활동참가율(%,'17.1~11): (15~19세)9.4 (20~24세)51.0 (25~29세)76.0

여성·장년·청년 경황을 추이



* 출처 : 통계청, '17년은 1~11월 기준

20대 후반(25~29세) 인구증감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기타] 구조조정 지속, 자영업 과당 경쟁 등은 제약요인

- 제조업 부문 구조조정 영향 지속 등으로 고용 회복세 제약 우려
- 자영업의 경우 장년층 노동시장 잔류 등에 따른 유입이 지속 되겠지만 과당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폭은 둔화 예상

* 고용원 無 자영업자(전년동기비, 만명) : ('17.1/4) 10.4 (2/4) 5.2 (7~11) 2.2

* 고용원 有 자영업자(전년동기비, 만명) : ('17.1/4) 6.6 (2/4) 1.4 (7~11) 0.6

◇ ['18년 전망] 취업자 32만명 증가 예상

- '18년 취업자 증가폭은 '17년(32만명)과 유사한 32만명 예상
- 고용률(15~64세)은 '17년(66.6%)보다 개선된 67.3%, 실업률은 '17년(3.7%)과 유사한 3.7% 전망

3. 소비자물가

◇ (물가) '18년 연간 1.7% 상승 전망

- (여건)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공급측 상승압력은 완화, 경기회복으로 수요 압력은 상승하나, 고용 등 불확실성 상존

* 두바이유(\$/b): ('16) 41 ('17) 53 [전년비 29.3%] ('18^e) 55 [전년비 3.8%]

- (부문별) 농축수산물·석유류 상승세 둔화,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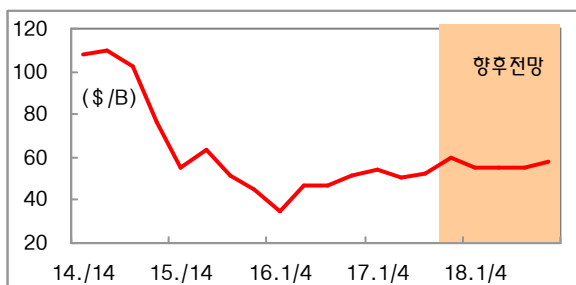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17년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축산물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오름세 둔화 전망

* 농산물 가격(전년비, %) : ('17.1/4)4.7 (2/4)3.6 (3/4)10.2

** 모돈(母猪)(천마리) : ('16.12) 974 ('17.9) 1,007 /산란계(만마리) : ('17.1) 5,140 ('17.12) 7,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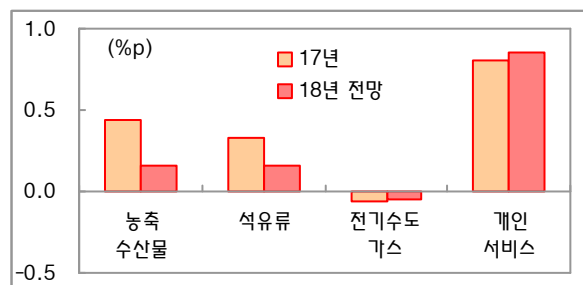
- (석유류)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오름폭 축소 예상
-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하('17.11월) 등 안정세 지속 전망, 다만, 일부 지방 공공요금(상·하수도료 등)의 상승요인 존재
- (개인서비스) 소비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식·관광·여행 등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예상
- ('18년 전망) 유가 상승세 둔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이 크게 작용하며 '17년(1.9%)보다 낮은 1.7% 예상

유가 예상경로(Brent油 기준)



* 출처 : EIA

품목별 기여도 전망



* 출처 : 통계청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수출(통관)] 연간 4.0%, [수입(통관)] 연간 6.0% 증가 예상

- (수출)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물량 증가세는 지속되나, 통관 수출은 기저효과 등으로 '17년(15.8%)에 비해 둔화된 4.0% 증가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 IMF) : ('16) 3.2 ('17) 3.6 ('18^e) 3.7

- (품목별) 메모리 수요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자동차·석유류 등도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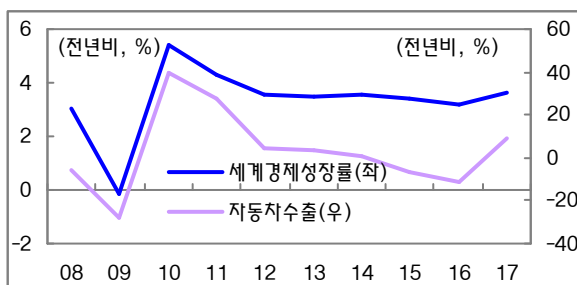
* 반도체 시장 증가율(% , Gartner): ('16) 2.6 ('17^e) 19.7 ('18^e) 4.0

- 다만, 해외생산 및 부품 현지조달 증가에 따른 휴대폰·가전 등 수출 위축, '15~'16년 선박 수주 부진은 부담 요인

* 가전 해외생산 비중(% , '08→'16): (TV) 87.3 → 97.3 (냉장고) 62.7 → 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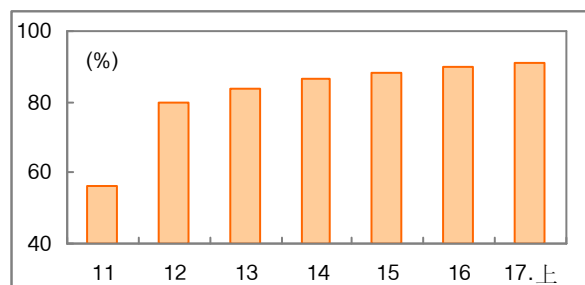
* 선박수주량(조선협회, 만CGT) : ('13)1,840 ('14)1,290 ('15)1,070 ('16)220

세계경제와 자동차 수출 추이



* 출처 : IMF, 무역협회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 출처 : IITP

- (지역별) 선진국·신흥국 회복으로 EU·미국·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 증가 예상, 통상현안 완화로 대중 수출도 개선 기대

* 對中 차부품수출(증가율) : ('15)△3.5 ('16)△12.3 ('17.1~11)△39.0

-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유가 변동성 확대 등은 제약 요인

* 對韓 수입규제 현황(건): ('13)18 ('14)21 ('15)20 ('16)38 ('17.1~11)27

- (기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수입) 소비 회복 등으로 수입물량은 증가하나, 통관수입은 유가 상승폭이 축소되며 '17년(17.6%)보다 둔화된 6.0% 증가 전망
-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면서 내수용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로 원·부자재 수요도 확대
- * 수입유발계수('14년 가격기준) : (민간소비) 0.24 (민간투자) 0.35 (수출) 0.42
- 다만, 유가 상승폭 둔화로 원자재 수입 증가율 축소 예상

◇ [경상수지] 790억불 내외 흑자 예상

- (상품수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나, 유가 상승, 소비 회복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확대되며 흑자폭 감소
- (상품외수지)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감소하며 적자폭 축소
 - 통상현안 완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증가, 휴대폰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여행·지재권사용료 수지 개선 예상
 - *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 : ('17.2/4)△65.7 (3/4)△62.7 (10)△49.3 (11^P)△40.8
지재권사용료수지(억불) : ('14)△53.8 ('15)△38.6 ('16)△26.7 ('17.1~10)△16.3
 - 다만, '15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 부진, '16년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선단 축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운송수지 부진 지속 전망
 - * 해외건설수주 증가율(%) : ('14) 1.2 ('15) △30.1 ('16) △38.9
 - 본원소득 수지는 해외 증권투자 증가·외국인 국내투자 확대 등으로 '17년과 유사, 이전소득 수지는 적자기조 지속 전망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불)	2016년	2017년 ^e	2018년 ^e
▶ 경상수지 규모	992	810	790
▪ 상품수지	1,189	1,183	1,136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97	△373	△345

2017~2018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16년	'17년 전망				'18년
		1/4	2/4	3/4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¹⁾	3.2	-	-	-	3.6	3.7
Dubai 유가(\$/bbl)	41	53	50	50	53	55
실질 GDP	2.8	2.9	2.7	3.8	3.2	3.0
민간소비	2.5	2.0	2.3	2.5	2.4	2.8
설비투자	△2.3	14.4	17.3	17.0	14.1	3.3
건설투자	10.7	11.3	8.0	7.6	7.6	0.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3	2.7	2.6	3.2	3.0	3.5
경상 GDP	4.7	4.9	5.0	7.4	5.7	4.8
취업자 증감(만명)	30	36	37	28	32	32
고용률(15~64세, %)	66.1	65.7	66.9	66.9	66.6	67.3
소비자물가	1.0	2.1	1.9	2.3	1.9	1.7
경상수지(억달러)	992	192	165	256	810	790
상품수지(억달러)	1,189	273	296	348	1,183	1,136
수출(통관)	△5.9	14.7	16.7	24.0	15.8	4.0
수입(통관)	△6.9	24.0	18.7	17.9	17.6	6.0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197	△81	△131	△92	△373	△345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7.10월)

별첨 2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 (Action Plan)

- ◇ 과제별 추진상황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완
-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실천과 성과로 이어져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행관리 철저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① 일자리 · 소득주도성장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 (하반기)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하반기) 	기재부 산업부
청년 고용애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2분기) ▶ (가칭)청년 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1월) 	중기부 고용부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및 공공분야 채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리/일자리사업 집행점검회의 개최 (매월) ▶ 공무원 선발계획 공고 (1월~2월) 	기재부 인사처
노동시장 격차 해소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안정자금 ETC·사회보험 연계 개편방안 마련 (7월) ▶ 소액체당금 요건 간소화 관련법 개정안 마련 (1분기)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1월) ▶ '새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 마련 (2월)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쉽표가 있는 삶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설계 신설 (하반기) ▶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상반기) 	중기부 인사처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 주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만호 공급 (상시) ▶ 대규모 유휴국유지 개발 1만호 공급 (상시) ▶ 정책모기지 개편 (상반기)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 의료비	▶ 동네의원중심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 (상반기)	복지부
	▶ 교육비	▶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 (상반기)	교육부
	▶ 통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요금제 도입 및 진입규제 완화 법안 국회제출 (6월) ▶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9월) 	과기정통부 방통위
	▶ 교통비	▶ 농촌지역 100원 택시 도입 확대 (상시)	국토부 농식품부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상반기) ▶ 의·치·한의학전문대 기회균형선발 확대 (하반기) 	고용부 교육부
② 혁신 성장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 구성 (1월) ▶ 진행상황 월별 점검(차관급 회의) (매월) ▶ 점검회의 개최 (3월)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과학기술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선정(3개소, 2분기) ·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개정안 마련·상정 (하반기) ·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7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 강화 (하반기)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전방위 금융 혁신	· 코스닥 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 (1월) · 연기금 차익거래 세제유인 제공안 마련 (하반기) · 벤처기업투자신탁 규제 완화(시행령 개정) (2월) · 테슬라 상장제도 개선 (상반기) 	금융위 기재부
	· 금융혁신 3종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금융평가시스템 개편 (상반기) · 신용·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하반기) · 혁신·신산업 중심 정책금융 개편안 마련 (하반기) 	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사회 · 문화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 마련 (상반기) ·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 (하반기) · 공공목적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추진 (상반기) ·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마련 (7월)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농축수산업 혁신 3대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 마련 및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조성 추진 (상반기) · 농신보 제도 개선 (3월) · '농업분야 청년 창업 지원체계' 마련 (1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서비스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 (상반기) · 지능형 스마트홈 융합서비스 개발(4월) · 유상 키포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업계 공존방안 마련 (3월) 	해수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소기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의 협업 활성화 대책' 발표 (2월) ·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마련 (1월) 	중기부 기재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6월) · 혁신모험펀드 운영계획 수립 (1월) ·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방안 마련 (상반기)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기존산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해운자동차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1분기)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등
교육·훈련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별 공동훈련 시범운영 (하반기) · 비경활인구 훈련·학습비 지원방안 연구용역 (상반기) 	기재부 고용부
노동시장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시 컨설팅 지원 우대 (상반기) 	고용부
규제 혁신	·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입법 국회 상정 (상반기)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 행정입법 · 그림자규제 전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O2O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 허용 (외국환거래법령 정비) (1분기) · 소규모 주류 제조자 영업허가 취득 의무 요건 삭제 (주세법령 정비) (1분기) · 「행정입법 및 그림자규제 정비계획」 마련 (1분기) 	
대외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 북방정책 로드맵 수립 (4월) · 새로운 통상정책 마련 (1월) · (가칭)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 (3월) · 수출금융 확대, 공동보증제도 요건 완화 (1월) 	북방위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③ 공정 경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발표 (1월) 집단소송 확대방안 마련 징벌적 배상제 도입 (하반기) 	공정위 기재부 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점검 (2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하반기) 	공정위 복지부 기재부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마련 (1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마련 (1월) 재정분권 종합대책 마련 (2월)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골목상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 및 원가 재산정 (상반기) 전통시장 육성사업 선정시 상생협약 의무화 (하반기)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공평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가상통화 과세방안 마련 (상반기) EITC 개편방안 마련 (하반기) 	기재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1분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방안 마련 (상반기) 아·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 협동조합 진출 관련 연구용역 (상반기) 	금융위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공공부문 관리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1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 2단계 추진 (하반기) 	기재부
④ 거시경제 안정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여건 개선 위한 공공투자 2조원 확대 집행 (상시) 안전설비투자펀드 운용기간·지원대상 개편 (1월) 	기재부 금융위 등
국내 소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여행 주간'을 '평창 여행의 달'로 확대 (1분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1월) 	문체부 기재부 권익위
금리 상승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상담거점점포, 전담창구 확대 (상시) 한계차주지원 3대 패키지 세부 계획 마련 (상반기)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경제설명회 확대 개최 (상시)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 (1월)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⑤ 중장기 도전 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전략 발표 (하반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출계획 상향 조정 검토 (9월) 	기재부
저출산 추세 반전 위한 생애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상시) 신혼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비율 2배 확대 (상반기) 상생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 (상반기) 근로혁신 인센티브제 모델 개발 관련지표 공개 (하반기)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 인사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 개선 (1분기) 취성패 내 경단여성 특화과정 도입 (하반기) 	고용부 기재부
다층적 노후보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재정계산 연계 개선방안 마련 (10월) 연금 펀드 국내주식 매매손익 비과세 방안 마련 (8월) 	복지부 금융위

별첨 3

2018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KDI)

※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

◇ 국민들은 혁신성장, 일자리, 중장기 대응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경제정책방향의 세가지 축으로 인식

⇒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국민요구 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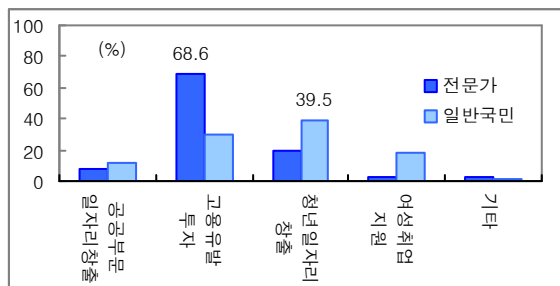
① (‘18년 경제정책방향)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지목(복수응답)

○ 그 외에도 혁신 성장(전문가), 중장기 대응(일반국민) 필요성 높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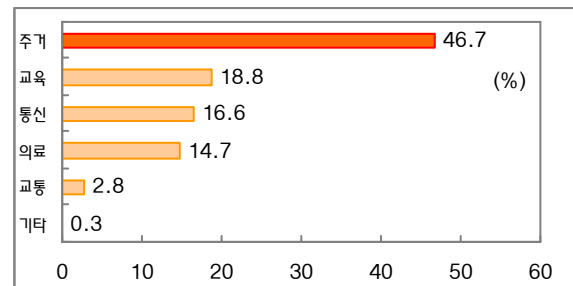
(%)	일자리·소득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장기대응	가시경제 안정 관리
전문가	59.7	34.6	18.6	28.6	18.2
일반국민	66.8	13.2	32.3	46.0	22.0

②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우선과제로 고용유발 투자 촉진, 청년일자리 창출에 높은 응답, 우선 경감 생계비로 주거비 지목

일자리 창출 위한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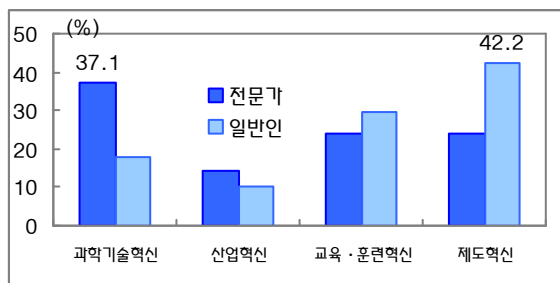
가장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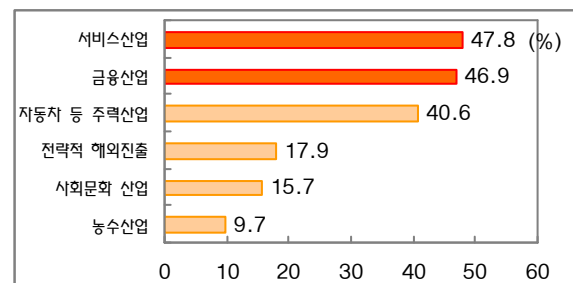
③ (혁신 성장) 전문가들은 R&D 등 과학기술 혁신이, 일반 국민은 규제개선 등 제도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 한편, 혁신이 가장 필요한 산업분야로 금융·서비스업 등을 지목

혁신성장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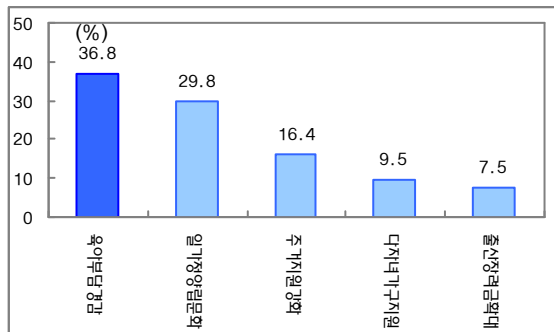


혁신이 필요한 분야(전문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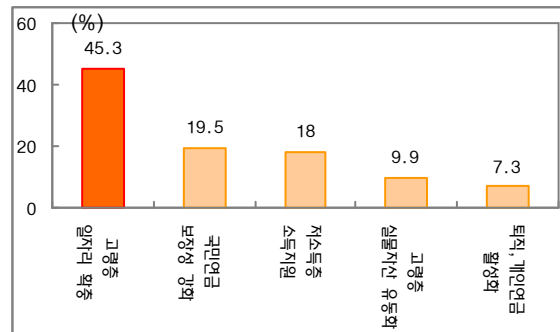


- ④ (중장기 대응)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육아부담 경감을, 고령화 대응에는 고령층 일자리 확충을 우선 정책으로 지목(일반 국민)

저출산 대응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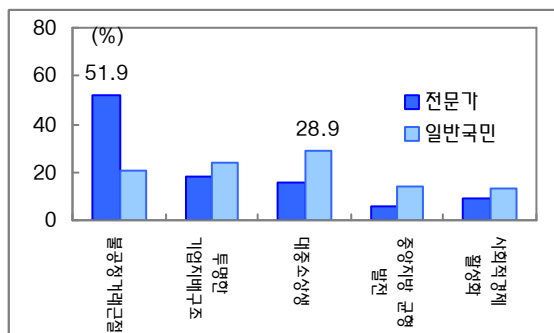
고령화 대응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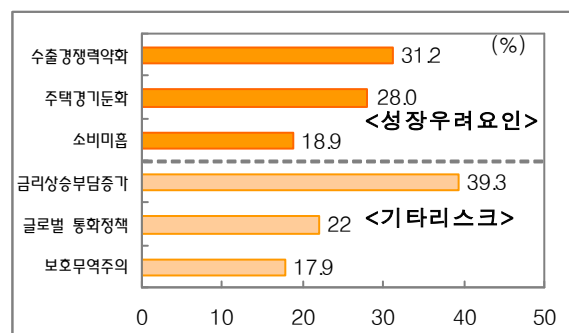
- ⑤ (공정경제·거시안정) 공정경제 확립 위해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이, 일반국민은 대중소기업 상생이 중요하다고 응답

- 거시경제안정을 위해 우선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수출·주택경기 둔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증가 등을 지목

공정경제 확립 우선과제



내년도 주요 리스크 요인



[참고] '18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오픈형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워드 클라우드 작성



- ◇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자리”와 “기업”을 가장 많이 언급
⇒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 지속
- ◇ 지난 설문때와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경쟁력” 등 언급 증가
⇒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등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심 확대